

제364회 국회  
(정기회)

##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2018년10월4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 유은혜) 인사 ..... 1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1
- 의사진행발언 ..... 27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 30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이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 국무위원(부총리겸교육 유은혜) 인사

○부의장 이주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유은혜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있었지만 국무위원으로서 새롭게 이 자리에 서니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느낍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가면서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희망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 말씀 하

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함께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0시06분)

○부의장 이주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포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본사상·애민정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 경기 남양주병 출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 철회 요구 건수가 7만 5000건에 이릅니다. 또 교육 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그리고 장래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또 교육계 원로 인사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요. 또 많은 의혹들은 과잉 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께서도 오늘 이후 국민들의 여론, 특히 교육계의 여론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지명하기 전에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임명 제청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헌법상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 제청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동안에 의정활동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면서 학부모나 학생, 생활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경험을 갖췄다 이것을 높게 샅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정말 교육부장관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또 교육 관련해서 불미

스러운 일, 도덕성 검증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검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면 검증했던 주체는 누구고 검증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인사수석실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가 별도로 검증한 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실은 검증할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검증은 청와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면 검증 없이 평소의 생각으로 총리는 제청권을 행사하신 거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검증 자료를 함께 보면서 협의를 합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검증과 제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협의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주광덕 의원 국무총리!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성은 총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내지 개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임 장관이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해결하려다가 국민적 저항,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그런데 그러한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 유은혜 당시 후보는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이것이 교육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부총리를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의장으로 총괄하고 조정해야 되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총괄지휘자로서의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역량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은 한마디로 측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교육의 전문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교육행정이 과연 옳았던가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년간 보아 온 그 경험 또한 소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총리의 지금 답변을 보면 유은혜 후보가 당시에 교육의 전문성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전문가로 분류되는……

○주광덕 의원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흠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총리도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충분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이 가운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내용도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홍영표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발언 내용을…… 솔직히 의장님이 이거는 좀 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정부질의 중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정책질의를 하셔야지요, 뭐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윤재옥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님, 질의한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이 전혀 없는데? 무슨 질의 도중에 원내대표가 나와 가지고……)

(「질문답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지 않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주영 자,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주광덕 의원 교육부장관님,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

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장관이 돼서 되겠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니까 어떤 학부모가 연락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면 꼭 질문해 달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입시를 총괄하고 입학 관계의 주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데 그 교육부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분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아이가 1996년도 유치원을 다녔고 199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쁘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광덕 의원 장관님,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동에 있던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강북에 사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주광덕 의원 아니, 제가 두 번째……

대통령께서 장관에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주광덕 의원 그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내가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이런 교육의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자녀 입학 위해서 위장전입도 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내가 교육부장관을 맡는 것은 내 양심에 위반된다 해서 혹시 대통령께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질문의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봐!」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주광덕 의원 아니,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맡아달라 그랬을 때 고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들겠습니다.

○주광덕 의원 교육부장관, 이제 차기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으로서의 일입니다. 교육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주광덕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 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쁘게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국민 앞에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주광덕 의원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장내 소란)

장관 들어가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광덕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의원 그러니까.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거나 인터넷에 국민들 여론 하는 것이 어쨌든 입학이나 입시에 관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근절시켜서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 줄 주무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 관리나 교육 현장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우리가 지금 국민 여론이 어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교육 전문성이 없어서’ 또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으로 한 90%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고 후보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아까 제가 7만 5000여 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 국민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 지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회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야당만 반대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떠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2일 날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네이버 포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임명에 대해서 '좋아요'는 한 1800명인 데 비해서 '화나요'가 1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는 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임명이다, 이런 네티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주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이 포털은 좋은 일에도 '화나요'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광덕 의원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입니다.

○주광덕 의원 아니, 총리님. 그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제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겁니다.

인터넷 포털만 그런 게 아니라 임명 후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125건이 임명 후에도 임명을 철회해 달라,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유가 지금 총리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패밀리 군단 만드시려고 그러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등 상당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정하시니까, 인터넷 맘카페에도 보면, 동탄맘이니 일산아지매니 성동구 중구 엄마모임이니 줌마렐라 죽 보면 '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면 되나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란 것은 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임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브리핑입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해명할 것 다 해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가 없다.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정말 오만방자하고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호소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타난 청와대의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총리!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야당만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은 임명을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그러한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주광덕 의원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지금 교육계 인사들이나 언론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잘 모르는 장관,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총선도 출마해야 될 처지이고 또 자신을 부총리로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고 결국 교육부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거다 이런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과오이고 부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한 것을 꼭 비전문가이고 무지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 하지 않았습니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국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요. 인사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주권주의나 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10월 2일 교육부

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의 협치 파괴를 선언한 정말 반헌법 행위가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허용된 범위 내의 인사였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주광덕 의원 총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사 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그때 보면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고르게 인사 등용하겠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께서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사에는 이의가 따릅니다.

○주광덕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500일이 넘으셨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주광덕 의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무총리 이낙연 아닙니다.

○주광덕 의원 지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 고사하는데 모시고 와서 직을 맡긴 적이 있느냐 그것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지난번에 협치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 또 야당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혹시 총리께서는 반대 진영에 있었던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내각에 제청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삼고까지는 아니지만요, 제가 몇 분 의원님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민변주의니 참여정부를 넘어서 참여연대정부니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소통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또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뭔가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국민의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가장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초대 법무부장관후보로부터 해서 최근에 금감원장후보자까지 아홉 분이 낙마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임명을 강행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너무나 부족한 국무위원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총리, 이 정부의 인사 문제 국민들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선 인사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장관급의 낙마가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문회 오기 전 단계에 이미 낙마를 했다는 것은 여론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습니다. 검증의 부실함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인사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주광덕 의원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한 총리의 답변은 아전인수의 변이고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주광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교육부장관의 인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탕평 인사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다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만든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지구는 거대한 온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녹은 얼음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금 남태평양의 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온실효과가 만든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나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지구를 꿰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보를 세웠습니다. 이 보로 인해서 깨끗했던 강이 저처럼 녹조에 뒤덮인 환경 재앙을 야기했습니다. 환경부도 이 4대강 재앙으로부터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4대강으로 우리의 강이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당시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만 했더라면 오늘날 4대강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책임 통감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전현희 의원** 앞으로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물관리 정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4대강 사업 공로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 직원이 유공자 훈장·표창을 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이

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동안에 여러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징계 요구라든가 또는 표창의 취소 요구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무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일반의 정서에서 볼 적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훈포장 수상자 중에 183명이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4대강 복원과 보 개방 문제를 두고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4대강 부역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당시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률적으로 업무에서 모두 배제할 것인가 또는 사안별 또는 개인별 판단이 필요할 것인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정부 차원에서 4대강 부역자들에 대한 징계 검토 혹은 물관리 업무에 배제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2월에 물관리 일원화법이 통과가 돼서 수질·수량 업무가 환경부에서 일원화되었습니다. 오랜 현안이던 통합 물관리가 드디어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토부에 하천관리 업무가 남아 있고 농림부·산업부에도 부처 간에 물관리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요. 물관리 업무 완전한 통합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물관리 업무의 통합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 물관리 일원화가 된 이후에 아직 저희가 충분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관리 통합이 된 직후부터 바로 장마 시작되고 큰물이 나고 이래서 저희가 기존의 수자원공사나 수자원국의 업무들을 홍수 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그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어서요 조만간에 저희가 새로운 혁신방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현재 통합되어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직 내부의 통합도 매우 절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들은 수량 우선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보 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우선하는 기존 환경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양 조직이 물과 기름 같은 조직인데 환경부라는 조직 내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이러한 철학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신이 다른 두 조직을 환경부 내에 제대로 통합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수 조절기능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내부에서 전체 기능을 놓고 다시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10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공단의 기능 조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서로 상하수도 관리를 자기 소관으로 주장하고 업무의 중복과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물 관리가 국토부에 남아 있고 또 부처 간에 업무가 중복되면서 향후 30년간 3조 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초래할 것이라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처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 관리 업무의 환경부 내로의 이관, 추진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우선 말씀하신 수공과 공

단의 업무조정은 저희 내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단계로 근본적인 업무진단들을 통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천 부문의 기능이 아직 국토부에 남아 있는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직이 더 완벽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다른 부처들 산업부나 농림부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물 기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통합계획들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환경부 내의 조직의 갈등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전히 농업용수, 발전용수 또 재해관리는 농림부, 산업부, 행안부에 물관리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각 부처 간에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추진계획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완전한 일원화가 무슨 뜻일까, 모든 물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뜻이라면 무리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해 주신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는 물관리의 통합 조정이라면 그 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또 하나의 문제는 산자부 소관의 한수원과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간의 댐 관리 일원화로 인한 갈등 문제입니다. 2016년에 기재부가 수공에서 댐 관리 일원화를 할 것을 결정했지만 한수원의 거부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수원과 수공의 댐 관리 일원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괴산댐과 관련하여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렸고요.



9월 11일에 괴산댐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발전댐의 수위 관리라든가 수량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관장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전현희 의원** 현재 북한강 수계가 수량 부족과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동해로 흘려보내고 있는 금강산댐의 물길을 남쪽으로 돌리면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남북경협을 통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복안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강산댐의 물을 우리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북한강의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의 일부로서 북한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고위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의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파리협정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전현희 의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강제성을 띤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이 협정에 따라서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의원** 이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파리협정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내법에 준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37%를 감축하려면 국가가 의무

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약 3억t 이상을 감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환경부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정부는 지난 7월에 그동안의 최신 배출 자료, 국내외 감축기술 동향, 산업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인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확대하는 것,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성 제고,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차 보급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37%의 저감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총 8840만t, 2030년까지는 2억 7500만t의 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은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 주신 도표는 2016년까지의 추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량은 하향하는 추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별 목표들을 저희가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현희 의원** 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의 단계별 매년 감축량과 그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예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축목표량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의원님,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방법은 연도별 방법이 아니라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간이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3년 단위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감축목표들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연도별로 하기에는 이게 미래계획이라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할당제도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과 맞추어서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라는 충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3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현재 민간기업인 약 560여 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그렇습니다.

○전현희 의원 그런데 그 할당이 전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기준을 할당했고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 전 정부에서 부과한 할당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이행률이 현재 99%에 달하는 등 매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이것은 기업에 대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할당기준이 매우 느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관련 할당량을 부과하는 기업의 수도 늘려야 되고 더 엄격한 할당량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년 단위의 목표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 기업의 배출권 거래량도 그것에 따라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591개의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을 받아서 17년까지 성과를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곳들이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모든 곳이 자기가 배출한 양만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는 자사에서 한 것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배출권을 사 왔거나 추가 감축계획을 외부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기가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했던 목표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 자체가 사실 연도별로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판매, 그러니

까 공매를 통한 방법들도 3%, 10% 이렇게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기존 산자부에서는 기업 논리에 맞춰서 탄소배출 할당을 했지만 이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좀 더 환경에 우선권을 두는 할당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들의 63.5%가 탄소배출 할당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을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총리실,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37%의 탄소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과 여기 계신 정치인들도 그러한 감축 의무와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나 시민사회,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 계획 안에는 각 부문별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한 실행계획들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지만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할 못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한 내용들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때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때가 17대 국회였습니다.

까, 16대 국회였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전 의원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의정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가슴기살균제를 2011년에 제가 정치권에서 최초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해결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가슴기살균제 사건을 지상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업의 둔감함, 정부의 무관심·무책임 이런 것들을 질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가슴기살균제에 약 400만 명 이상이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증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피해자 접수를 했는데 60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그중에 600여 명이 피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구제기금을 기업에서 정부가 거둬서 1250억원이 현재 쌓여 있는데 그중에 약 100억만 지급을 했습니다. 1100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아직 피해자들은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정부에서 분류한 인과관계 등급이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폐섬유화 증상이 있어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 3·4단계는 인정을 하지 않아서 피해구제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많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보상도 아니고 배상도 아닌 단순한 기업에서 거둔 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엄격한, 재판보다도 더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250억, 현재 거둔 구제기금,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법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천식을 대상 질환에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후관계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가슴기 피해로 인정한다든가 하는 등까지는 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면적으

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법적인 정합성 같은 것을 갖추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현희 의원**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뒷받침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모시고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을 저희들이 잘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무거운 중책 맡으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6년간 교육위 간사로서 교육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정책을 논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 교육 관련 현안,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영어 금지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됨에 따라서 유치원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해서 교육부에서는 금지 여부를 1년간 유예하고 그동안에 여러 현장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라든지 유아 시기 그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내년도 원생모집이라든지 계획들이 10월 중에 다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교육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놀이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후에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또 유치원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또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캠퍼더 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신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으며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경기도로 소방차를 보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임을 보여 줍니다. 교육정책에서 백년대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락가락과 결정 장애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대입 공론화는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 혼란만 초래했습니

다.

저출산 정책도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1.17명에서 2017년에는 1.05명으로 줄었고 급기야 2018년 2분기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라도 이제는 모든 논란을 뒤로 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미래 준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개혁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를 보면 대북·외교·복지 분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경제·인사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는데요. 화면 보듯이 대통령 지지도가 80%를 넘었을 때도 유독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그것이 의욕적일수록 저항이라든가 위화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 관리에서의 정교함이 아쉬웠다는 고백도 드립니다.

○김삼화 의원 결국은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책임을 미루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육정책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또 숙려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 정책 지연만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벌여 놓은 정책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후퇴할 명분 찾는 것 아니냐? 또 대통령 공약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해서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이것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입 개편에 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시다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혼란이 최소화됐다 이런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팡질팡으로 비친다고 그러면 저희 본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화 의원 그런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정부에 ‘교육부장관도 교체하고 청와대에 교육수석비서관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장관은 교체가 됐고요.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에는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석비서관은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대신에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이 가져온 폐해를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나 또는 국가교육회의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른바 속칭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의원 그 부분은 잘못하면 여론에 휘둘리고 또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덕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사과를 드렸고요.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

수는 부정확한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그대로 그냥 살아서 굴러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했다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라든가 현장에서의 왜곡 가능성이라든가 또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 이런 걸 균형 있게 듣고 판단을, 그런 기회를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갖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그렇지만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청원도 청와대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구요.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제청을 했는데 제청하신 입장에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법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총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지금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행태고 또 국민의 의사도 무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많은 논란 끝에 취임을 하셨는데,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자리의 직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한다고 하면 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직을 어떻게 잘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삼화 의원** 그런데 사실은 총선 출마는 누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거취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 결정이라는 것은 1년밖에 안 남았고 사실상 총선 선거 과정도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장관께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삼화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총리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육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 문제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해 왔던 시민단체들까지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문제인 대통령 교육 공약 되찾기 촛불문화제’ 이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듣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지금 이렇게까지, 다시 촛불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생

각이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절대평가 확대 공약은 파기된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약의 파기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찬반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의원** 또 하나,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매번 보면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은 없고 대입수능 과목에 무슨 과목을 넣을지 뺄지, 정시·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 하면서 현안 처리에만 급급해 왔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과정 비교한 건데요. 보는 바와 같이 교육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만 사실상 유일하게 집어넣는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실 잘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풀이 또 기계가 채점하는 시험, 점수에 따라서 줄 세우기식 하는 상대평가 이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특히 일본이 우리하고 그동안 교육과정이 비슷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교육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이거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데는 10년 걸렸지만 그 이전의 논의 과정, 거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공허해 보이는 논의까지를 포함하면 40년 동안 교육개혁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긴 호흡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김삼화 의원** 우리도 이렇게 뒤쳐지지 않게 교육개혁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 논의는 지나치게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대학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

로 학교 시험방식이나 교실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긴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 위주의 상대평가가 창의력 개발을 얼마나 억누르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점수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런 고민 또한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그만큼 교육부에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난마처럼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점점 줄고 대학은 많기 때문에 대학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기본틀을 보면 대학평가 및 등급화를 통한 정원 감축 정책 이것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것도 보면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해서 진단제외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렇게 나눠서 대입 정원을 2021년까지 1만명 정도 감축하겠다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김삼화 의원 그런데 화면을 보다시피 2019년 이후에는 대학입학 자원하고 대학정원 간에 역전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만 2000명, 2021년에 6만 5000명,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1만 명 감축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임 장관은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시장에 맡기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 중에서 당연히 지방대학이 더 피해가 크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총리님께서도?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삼화 의원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부실 대학을 청산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지방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역의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공감을 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거점대학·강소대학 중심의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삼화 의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대학 청산 지원과 관련을 해서 교육부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도 2023년까지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 같은 곳의 폐교에서도 아시겠지만 교육기관 폐쇄, 학교 구성원 보호 이것을 넘어서서 또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폐교 대학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뱅크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대학들이 차츰차츰 폐교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기구에 맡길 것인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총액을 대학들한테 균등 배분하는 이런 것으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연명시키는 그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학재정 지원을 지방 거점대학 그리고 지역 강소대학 이런 곳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점대학과 강소대학 중심의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을 끌고루 지원한다는 정책에 나름의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부실 대학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정책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또 직업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냥 여전히 관련 부처만 쏙 나열돼 있고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것은 관계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 준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직업의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수명은 짧아져서 직업을 평생 동안 여러 개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05년 이후에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만 152조 8000억 원이고 내년 예산이 보니까 30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에 함께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더니 금년 하반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게 0.97명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까지 정책들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가임기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삼화 의원 저출산의 가장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정부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표를 한

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저출산은 취업과 관련된 노동시장 또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시장,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교육 또 보육과 관련된 보육시장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중첩되어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래서 최근에는 더군다나 ‘출산 격차’ 이런 말도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들어 봤습니다.

○김삼화 의원 최근 10년 동안 출산을 보면 고소득층의 출산 비중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 같은 일자리가 안정된 그런 경우에 2배 이상 출산율을 보인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봤습니다.

○김삼화 의원 이제는 출산마저 불평등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정말 안정된 직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육아휴직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또 복직을 해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등 가족 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제도 형태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들어 봤습니다.

○김삼화 의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과 같이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보육에 따른 소득 감소 또 지출 증가 위험에 대처도 하고, 또 출산율은 사실 우리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새 정부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출산율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산정책의 어떤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양성평등, 여성의 일자리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출산정책을 다시 재구조화시켜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내용이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유아보육보험 제도 이것은 일단 출산 관련된 또 젊은 층을 위한 재정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이미 9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부족한 부분이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에 보육료 부담은 누가 해 줄 것이냐, 육아휴직 수당은 누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한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사실은 여야도 없고 온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차·2차·3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뚝뚝 뭉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T 강국인 우리에게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뿐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야 우등생이 되는 교육, 열심히 공부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육,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김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삼척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파를 떠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살아갈 귀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민궁재갈(民窮財竭)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민생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치 보복에 몰인하다 보니 미래를 위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적폐도 끊임없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한다며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마다 각종 조사위를 구성하여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에 여념이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본래 취지는 퇴색됐고 과도한 정치 보복으로 인한 국론 분열, 법치주의 훼손 등 부작용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물론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추석 민심은 싸늘하였습니다. 민생 현장의 곳곳에서 들렸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먼저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불패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직 의원들의 청문회는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은혜 장관의 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관계가 잘못된 의혹 제기나 또 근거 없는 그런 논란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셨던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허위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은 병역 기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당해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병역이 면제가 된 사유였고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고의적인 병역 기피였던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들이 사실과 다른 저의 불법적인 문제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좀 전 주광덕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장관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됐던 문제들이 적시됐습니다. 거기에서 허위사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논란이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그 부분은 제가 2016년도에 교육공무직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생겼던 논란이었고 제가 지명되자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소명도 했는데요.

당시 교육공무직법의 배경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2014

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공무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감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이철규 의원 장관, 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용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철규 의원 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법안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마치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했고 그 법안도 철회했구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청별로 이미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회계직이나 또 학생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학교의 공동체 생활을 이어 가는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요.

○이철규 의원 그런데 왜 철회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의 부칙 조항에 영양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면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부칙 조항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마치 다른 모든 분야의 교사……

○이철규 의원 그만하지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비정규직을 교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철규 의원 장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과도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이철규 의원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이 자리의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장관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이철규 의원**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하게 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 지역 사무실은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을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입찰했을 뿐입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다 물어본 거잖아」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의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들어 봐요, 좀」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는 것조차도 허락받고 해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장관, 그런데 임대인 측이 부당하게 임대했다 해서 6명이 중징계를 먹고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차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세히 소명한 바 있었는데요. 징계를 받은 담당자들은 내부의 내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 됐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외압도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입주했을 뿐입니다.

○**이철규 의원** 그렇습니까? 당시 교문위원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랬습니다.

○**이철규 의원** 피감기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요. 피감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동안 수차례 임대인은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수차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자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저는 그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관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철규 의원** 또 모르쇠입니까?

장관, 그러면 귀책사유가 없어도 현재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계속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요, 이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나 단 한 푼의 임대료와 관련된……

○**이철규 의원** 간단히 답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피감기관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징계를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배려 깊이 또 사려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유야 어떻든,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저의 귀책사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당시 입찰 과정에서 개찰도 하기 전에 장관은 그 사무실로 개소식을 하겠다고 SNS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컴퓨터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입찰 과정은 개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무실이 2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개찰을 30분 정도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 계속 열여덟 차례나 유찰됐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30분 정도 먼저 급한 마음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의장님, 대정부질문은 정치적 현안이나 국정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정치인의 사무실로 줄 수 없다고 거부해 가지고 얻지 못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도 교문위원인 유은혜 장관께서는 그 사무실을 당당하게 임차하고, 그것도 개찰도 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 개소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다른 의원님이 그……

(「정치공세예요. 인격 모독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홍영표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이것은 의장님이 경고를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만들면 됩니까?)

(○**김성태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의원이 대정부질문 하는데 왜 나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부의장 이주영**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뜻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십시오.

○**이철규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장관, 잠시 전 동료 의원 질의 시 명문학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학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글쎄요, 통상적으로 명문학교다 하면 강남의 8학군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의 딸아이를 덕수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덕수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었고 교육비도 저렴하고 또 교육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냈던 거고,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첫 아이가 학교 입학했을 때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렇습니다. 명문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

육수장이 명문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린 바 있고요……

○**이철규 의원** 위장전입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명문학교다 아니라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는 있어도 제가 학교를 명문학교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민주화운동 한다고 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돌보려면 집 가까운 곳이 낫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민주화운동을 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드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왜곡하면 어떻게 해요.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 대정부질문 해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하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전입을 했던 그 주소가 대한성공회 성당에 있는 신부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저의 딸아이의 유치원 친구가 그 신부님의 자제분이었고 그래서 친구의 집에 전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신부님이 살고 계신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고 위장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명문학교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이를 좀 더 학교에 잘 적응시키고 키우고 싶었던 엄마의 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한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이철규 의원** 발언 좀 합시다.

장관……

(장내 소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고했는데 주말에 20여 차례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사실이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 사실과 다르면 실정법에 저촉되

는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재에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정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규 의원** 자,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인지해서 수사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유은혜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검찰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문제가 된다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파적 편가름을 넘어서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난 9월 5일 날 소위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이철규 의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이철규 의원** 장관님께서 그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아마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은 주로 인권을 중시하는 측면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법 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과잉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당시 조사위가 발표한 세 사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또 부적절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공감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다른 무엇을 떠나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생명 이것을 보호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또 공권력과 국민과의 격렬한 대치가 있었

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잉 사용한 부분이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사위가 지적한 것 중에서 민사상·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은 사법 판단을 끝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거 판단하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법절차가 보니까 명료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 영상은 당시 한강로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투척 장면입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새총까지 동원돼서 무차별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당시에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고 그래서 판단을…… 질의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 영상 보시고 나니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마스 그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시급한 진압을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작전은 결국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한 이런 폭력행위가 자행돼도, 진압 과정에 다수의 희생이 우려된 데 대해서 방치해 뒀야 됩니까? 지극히 위험스럽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특히 경찰을 지휘해 보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권력, 특별히 제복공무원, 그중에서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자체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역할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가 되었든간에 결국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이 결과적으로 작전의 실패든 이런 많은 국민들 희생을 따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경찰관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입장입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 책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정부는 결국은 무한책임을, 뭐 그것이……

○**이철규 의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제 생각에서는 위로하고 또 위무하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법집행이 잘못됐다는 진상조사위의 판단,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래서 제가 의원님 모두에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의 판단 전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절차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이철규 의원** 법의 입법과 법집행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상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위를 진압하는 데 과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장관께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아마 당시에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철규 의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로였고. 다만 그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법집행을 무력화하고 무효화하려는 이런 결정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마당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법집행 절차라든가 귀책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가서 따지는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어떤 시위조차도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존중받아야 되고 앞으로 시위를 책임지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이행된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판단된 법원의 모든 재판 결과는 무효화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권고 중에서 특히 인권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권력 행사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고치겠고 또 그런 부분은 제도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하는 민사상, 형사상 여러 귀책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이미 절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철규 의원** 지금 젊은 경찰관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자마자 용산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춘, 청와대 코드에 맞춘 진상조사위의 결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제주 강정기지 반대시위대에 대한 법원

의 이의신청 포기과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그것은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양측의 입장 변화가 서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공권력을 대신했던 경찰 측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에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앞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측도 이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 달라 또 그리고 공권력 집행자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금도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인 고려로 그냥 ‘취하하라’ ‘포기하라’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아마 그 갈등의 수준, 특히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폭은 사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큰 갈등이었습시다.

그 문제를 푸는 일차적인 단서로 아마 최소한도 정부가 무조건 우리의 공권력 집행은 옳았다, 법대로 했다고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강정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시위가 단순히 환경 파괴 또 생존권을 침해한다고만 시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제주 강정기지를 해적기지라고 칭하면서 정부 정책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인식이 다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지켜야 되겠다는, 분명히 원주민들의 그런 절박한 요구가 가장 우선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른 정치적 주장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했더라면 많은 오해와 마찰을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점에

서 정부가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반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은 치안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또 과도한 결정들이 집행돼서 더 이상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는 경찰이 이렇게 조롱받거나 혹은 경찰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지만 경찰조차도 누구에게 지휘를 받든 간에 위임은 결국 국민들이 권한을 행사하라고 위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도 자제되고 또 절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경찰의 직무 집행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마치 무슨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그런 인상이나 혹은 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도 가능하면 그런 오해가 없고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홍보 댓글지시 공문입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공문입니다. 전 공무원들 상대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공문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비판 보도를 했고 당시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대변인의 당시 그 판단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절하게 논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철규 의원**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댓글 자체가 법에 위반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시키면요? 시킨 자는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쎄요, 시킨다고 해서…… 어떤 조직적인 댓글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허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문제되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 댓글 작업을 시켰다고 그 4년 후 경찰청장이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적극 대응하는 댓글을 게재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그 부하 직원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정치 개입의 문제인 거지, 댓글을 단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정치적 편향성 없이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게재하라’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실관계를 가지고 댓글을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더군다나 정부 예산까지 써 가면서 했다면 그게 문제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철규 의원** 그런데 당시 2006년도 지시 공문도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전부 다 공문이 시달렸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더 강합니다, 경찰청장의 부하 지시가 더 강합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아까 자료화면에 떠오른 건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 주신 것밖에는……

○**이철규 의원** 드린 말씀이 사실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또 편 가르기라고 봅니다. 왜? 정권을 빼앗긴 전 정권에 도움이 된 댓글은 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댓글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난 정부에서의 댓글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사였느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철규 의원**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마구잡이로 댓글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여기 다 불러다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발상은 위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댓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되고 있듯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면 과거 2006년도의 댓글 지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2006년도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 공문 아까 띄웠는데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고소 고발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소 고발 그 1건만 당한 건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그린벨트 해제정보 누설로 피소가 됐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심재철 의원은 고발된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카드의 결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가 그 두 사건의 압수수색의 시간적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건의 성격이라는 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지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압수수색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은 다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그런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 예상됐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 압수수색의 목적이 뭐니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 전산에서 다운된 것은 자료를 받지 않아도 이미 다 전산상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강수를 두는 검찰의 모습이 과연 공정하고 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님의 개인 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보좌진에 대한 방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이철규 의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의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1일 날 합의한 합의문에 입각해서 관련된 법령들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당시에는 8월 달까지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이 됐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이철규 의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철규 의원** 핵심이 뭐니까, 합의문의 핵심?

○**법무부장관 박상기**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다만 경제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경찰의 1차 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 장관님은 평소 신념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또한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이후 대통령의 말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 충실한 개혁안이 나왔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는 그런 합의문, 6월 1일 자의 합의문에 충실한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검찰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

가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철규 의원** 검찰에서 굳이 수사를 하겠다면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을 완전히 분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당장 법 개정 없이도 법무부에서 내규로도 얼마든지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런데 사실 그 분리라는 것은 수사검사의 공소 제기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분리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찰 조직 내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철규 의원** 근대 형법이 기소와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맡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것은 한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같이 한다면 수사과 기소를 같이 한다면 했을 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기소라든가 재판에 어떤 강박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거지요.

○**이철규 의원** 그것이 기본 이념인데 이념에 충실하지 않고 지금 개정안은 그저 서로 구색 맞추기, 짜깁기에 불과하다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안은 조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기 두 기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합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기본 정신에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게 만들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근대 형소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안을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안의 내용에 맞는 법령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검찰에 발목이 잡혔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발목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면 이제 문제인 정부가 그토록 추구해 왔던 근대 형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경찰도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리한 수사가 없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면 영원히 닭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선진 제국에서 이 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취지가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의원님께서도 사실 경찰의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의원** 총리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시지요.

어지간하면 총리님 안 모시려 했는데요.

유은혜 후보 장관 제청을 할 때 검증 자료를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철규 의원** 총리님께서 보실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누구나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6년간 일하면서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셨을 거다라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 우려를 드

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규 의원** 아까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님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를 들면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철규 의원**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님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웃음소리)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장관도 친이나 아니냐 이런 것과는 무관한 분이고요.

○**이철규 의원** 총리님, 들으셨을 테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철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여 년 만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명암도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계승할 역사는 승계·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적폐 청산을 찬성합니다. 중단 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적폐 청산은 신념을 달리하는 상대 진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 자영업 몰락, 집값 급등 등 민생은 파탄 지경에 처했는데 정부 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이 정부는 혹독한 세금과 부역이 호환보다 무섭다는 고사를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망한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의장 문희상** 오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전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청문요청 기한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14일 인청을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이 19일을 주장해서 결국 하루 넘겨 19일에, 남북한 정상회담 중에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불패의 원칙을 깨겠다, 반드시 한 사람은 낙마를 시키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 19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흠집 내기 전술로 보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유 후보에게는 20여 종류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매일 한두어 개씩 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백 언론이 비슷하게 기사를 씌으로써 기사가 수천 개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흠집투성이 유은혜가 됐습니다. 청문회 내내 심야까지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 SNS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딸의 위장전입,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는 가난한 워킹맘으로서 시어머니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시댁 주변을 임대료 전전하면서 1~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겼습니다. 옛날에 명문초였던 덕수초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를 청와대에 모시고 가서 임명장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여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불까요? 16년 국감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광산도·한선교·염동열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그때 나왔던 200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당시에 문체부차관은 김종, 체육공단 이사장은 그 심복과 친박인 이창섭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17년과 18년에는 조용히 지나갔다가 이번에 옛날 서류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의도가 뻔하지요.

국민청원, 장관이 직접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아들 군대, 개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해 아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보내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결국 거짓과 해명으로 공단과 언론이 점철을 한 겁니다.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지요. 위장전입, 사과했습니다. 교통 위반, 이건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평풍게임이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좋습니다. 다 물어봅시다. 유은혜를 까발립시다. 자질·비전·전문성 검증합시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유은혜 후보 잘 모릅니다. 다른 의혹이 있다면 물어봅시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청문회 고칩시다. 저도 청문회에 설 일이 없겠지만 이런 청문회 두렵습니다. 너털너털해지는 청문회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하는 미국 상원을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일부 문건입니다. 이것보다 7배 많은 문건을 제출을 하고 FBI와 CIA와 국세청이 검증을 합니다. 차관보 이상 모두 합니다. 한 상원의원만 반대를 해도 백악관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전에 개별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걸러냅니다. 진짜 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 그리고 심각한 도덕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청문회로 고칩시다.

언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에 맞서 쓰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걸러 내는, 안 쓰는 판단력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쓰는 언론이 있는 곳에 아무거나 말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정부와

정당이 버섯처럼 피어나는 법입니다.

나라의 미래, 민주의 미래는 언론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자와 데스크의 용기, 판단력 그리고 건전한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이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야 민주와 미래가 꽃피게 될 겁니다.

제 오늘의 충언이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실행이 돼서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위의 인사청문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문서답과 불성실로 일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질문 그 자체마저 봉쇄하려는 의사진행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 조항을 보면 대정부질문 범위에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국정이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대한민국의 교육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야 할 교육부 장관의 자질 문제가 국정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이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그 말은 이제 구시대의 공허한 외침이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적시에 어떠한 국정을 수행하느냐, 리더가 누구냐 문제는 정책 성패의 가장 중요한 가늠추가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 동량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은혜 장관은 현역 의원으로 최초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인사입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것은 유은혜 의원뿐 국민들의 검증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유은혜 의원에게 절대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무수한 외침은 야당 의원들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소중한 대정부질문의 자리가 유은혜 의원에 대한, 유은혜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의 자리가 되게 만든 근본 원인의 제공자는 끝끝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유은혜 장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국민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궤변과 오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길을 선택하고 만 문제인 대통령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의원을 두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장관이다, 사회부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시하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을 저 자리에 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시가 결코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기에 찬 답변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정할 수 없는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주는 동료 의원들의 피치 못하는 그 충정을 오히려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유은혜 의원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유은혜 후보의 한 치의 반성과 부끄러움도 없는 오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덕의 여하를 떠나 그렇게 무수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원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불과 2년도 채 못 되는 시간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유은혜 의원과 같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여당 역시 그 자세로 해야만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본연의 역할을 하

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는 야당 의원의 합법적 질문을 방해하는 비신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국회는 모든 사안을 가감 없이 제기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자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야 대결의 근본 책임은 문제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품이 모질지는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원칙을 어겨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2016년 12월 문제인 대통령께서 어느 시사 잡지의 공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든 인사 원칙을 계속해서 어김으로써 여야 간 정쟁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장관 개인의 문제 이전에 대통령의 문제이고 청와대의 문제이고 이 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정비리, 병역기피, 탈세가 아니라면 공직후보자 누구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우고 약속한 원칙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약속과 원칙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원칙이 어긋나면

그 인품과 능력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배제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일 더 잘한다더라’라는 취지의 격려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에 빠진 자기들만의 착각이고 격려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반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협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음을 스스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의 흥망사를 보면 국회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민심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누르고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의 비판과 지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진일보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전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실질화시켜야 합니다.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대통령의 독선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수고하셨습니다.

##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계속)

(14시33분)

○의장 문희상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울 마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저는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전에 먼저 유은혜 장관께 몇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 2년, 저는 야당 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은혜 당시 의원과 함께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여야 협치를 이루는 간사 역할을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전한 적은 없었지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야당의 반발을 보면서 이것이 유은혜라는 정치가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표적으로 한 것인가, 심지어는 무례하게 임명 하루된 장관에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장관의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이 사과를 계속한 그 본인의 실수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본인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고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그런 질책과 비판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제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전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이제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직을 얼마나 책임 있게 그리고 약속한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하는지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고, 온 힘을 교육 개혁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임명되자마자 아주 장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또 사안이 하나 있지요.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가 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하교시키는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출산위원회에서 그런 정책을 제안한 이유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사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훨씬 더 커 집니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은 그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위원회의 그 정책 제안의 취지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통해서 실효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저출산위원회, 지방정부까지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는 TF를 구성해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정책 대안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하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장관께서 나서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생각을 먼저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의 교사가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 이유가 굳이 일 더 하기 싫어서 그런다라는 식으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균형감 있는 그런 교육부 장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손혜원 의원** 저는 오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는 내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상식으로 본다면 일단 문화는 인간의 흔적입니다. 자연이 신의 작품이라면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 낸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인간의 흔적이 쌓여서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나라와 민족을 이야기하는 문화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문화는 동 시대의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고 진화시켰으며 후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문화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대를 반영합니다. 문화는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다른 지역으로 퍼져

가기도 합니다.

장관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문화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문화가 생성되고 그리고 진화되고 다음 전승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장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는 우리 삶의 발자취이고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공동체의 생활 방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그리고 정신적·물질적·미적·정서적 가치의 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는 역사와 마찬가지로 생성-성장-융성-쇠퇴-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들은 융성·발전하면서 전승되지만 어떤 문화들은 쇠퇴해 가면서 우리 삶 속에 빛깔과 향기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 그 생성과 진화를 위해서 문화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문화부가 하고 있는 대부분 일이 사실은 문화 진흥과 발전, 지원에 관한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우리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문화를,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는 누가 이어 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리 조상들이 역사 속에서 저희들에게 총체적으로 전수해 주신 것이지요.

○**손혜원 의원** 그러면 한번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부의 예산이 과연 우리 문화를 제대로 생성하고 진화시키며 전승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전통문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역사를 통해서 받았으며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이 전통문화에 관련된 예산이 불과 2.7%입니다. 이 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생성시키고 그리고 전승을, 다시 내려야 되는 그 문화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화 분야 통틀어서 22.5%이고 전통문화는 2.7%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전체적으로 합해서 31%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적습니다.

○손혜원 의원 최순실과 차은택이 농락했던 콘텐츠진흥원의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손혜원 의원 기재부나 문체부나 늘 예산 때문에 늘리지 못한다, 사람을 늘리지 못한다 항상 불륜을 치는데, 그때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의 1700억은 제가 깎은 것입니다.

이 예산을 고무줄같이 늘리는 것에 혹시 우리나라 문체부의 맹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최순실이 들어와서 농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에 문체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준 것은 미래부가 생기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업과 예산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준 측면이 있고요.

또 큰 사업 하나가 종료되면서 줄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주로 콘텐츠 분야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말씀하신 대로 차은택·최순실 관련 이 부분에서 증액된 예산이 문화 발전,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 쓰였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유화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거의 개인 마음대로 쓰다시피 이렇게 집행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때 예산을 600억 이상 삭감을 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고무줄처럼 늘렸던 그 예산, 지금도…… 그러면 우리 전통문화를 위해서, 우리 문화 생성을 위해서 장관께서 늘릴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게 예산을 갑자기 어떤 항목도 없이 늘릴 수는 없지만요……

○손혜원 의원 명목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렇습니다. 명목이……

○손혜원 의원 전통문화와 우리 이 시대의 문화를 만드는 데 그 돈을 써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의원님과 함께 전

통문화 진흥을 위해서 예산을 좀 늘리자고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또 예산 증액의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의 소요를 저희와 협의를 해 주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문화와 일반 콘텐츠 이것이 진흥원이 따로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문화의 하나하나 종목별로, 도자기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한글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한지진흥원도 만들어야 되고, 나전칠기진흥원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진흥원은 하나도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그저 새로운 미디어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새로운 미디어가 전공입니다, 전통문화가 전공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관께서 꼭 챙겨 봐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종목이라든지 이것의 리즈너블(reasonable)한 자료를 드릴 테니 이 예산을 늘려서 다 함께 잘사는 그런 문화강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구분하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는 문화재와 그다음에 무용, 연극,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재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능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혜원 의원 우리가 이 시대에 베토벤을 만날 수 없고 모차르트를 만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아카이빙으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그런 곡이 나오고 그런 연주가 나오는 것이지요.

이 무형문화재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수해 준 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다시 후손한테 전



수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송례문이 불이 났을 때 우리가 바로 수백억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해 놓고…… 아직도 국보 1호지요? 그런데 이 소멸되는, 인생 다하면 소멸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플 때 가는 의료보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무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이 유형문화재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 의료보험도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병원비 보전을 해 준다는 생각은 혹시, 우리 유형문화재가 어디 상처가 있거나 깨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사람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손혜원 의원 이분들이 손을 통해서 전수하지 않으면 사라져 가는 것들이, 유형문화재보다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한 200분……

○손혜원 의원 200분 남짓,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데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유형문화재의 반의 반만이라도 무형문화재에 예산을 주신다면 한번 제대로, 우리 문화의 꽃이 되는 전통문화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표를 보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제가 죽 봤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꽤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전체 관광객의 78.8%가 서울에만 다녀 갑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손혜원 의원 총리께서는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 출신이시고 각별하게 그 부분에 애정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들이 지방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객은 왜 서울에만 올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교통, 숙박, 쇼핑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외국에 나갈 적에 처음 가면 그 나라의 수도를 먼저 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외국인 관광이 아직은 발전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이 관광자원이 많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손혜원 의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역사적으로,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도쿄에 가는 게 46.2%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이 각 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놀라운, 지역과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통으로 지역을 가기 어려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 부분들을 한번 죽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여행에서 서울에서는 고궁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는 순서를 보니까, 관광객이 첫 번째가 쇼핑입니다. 명동과 동대문시장과 남대문시장입니다. 그리고 고궁입니다.

살 것들, 물건들이 풍부한 것이지요. 화장품이 세계적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지방에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방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지방을 관광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지방행정을 맡으면서 참 부심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노력하는 만큼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요, 특히 숙박이나 쇼핑의 경우에는 시설을 갖추더라도 손님이 그만큼 와 주셔야 유지가 되는데 그런 전망이

없으면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관광의 대상이 서울에만 집중되고 전국에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관광전략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의 속도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사 할 때도 시장·군수님들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장님들께서 이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효과가 빨리 나오는 것은 관광입니다. 그리고 임기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도 관광이다, 이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말할 적에 그 인구는 고정인구를 말합니다. 그 고정인구를 감소에서 증가로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그 고정인구의 감소를 유동인구의 증가로 때우려고 지자체들이 아주 사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관광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비교적 수도와 지방이 골고루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명치유신 전까지 수도가 다른 데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봉건사회가 오래 계속돼서 여기저기 자기 나름의 문화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마다 나름의 매력을 지키고 키워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총리님, 우리도 수도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랬지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손혜원 의원** 우리 백제의 수도는 어디어디지요? 공주·부여는 알고 있지만 한성백제, 가장 오랫동안 백제의 수도였던 곳이 서울인 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손혜원 의원** 서울의 그 중심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위례……

○**손혜원 의원** 풍납토성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풍납 그쪽이지요.

○**손혜원 의원** 70년대에 풍납토성은 왕궁이 아

니라고 우기면서 아파트로 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5000명의……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당시입니다. 1972년 당시에 저렇게 토성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는 왕궁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아파트와 집으로 채워 버려서 지금 저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왕궁이라는 증거물이 계속 발굴이 되면서 스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안의 4만 5000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든지 내보내 주든지 어떻게 해 달라. 집도 못 짓고 나갈 수도 없고.

총리께서 최근 여기에 한번 왔다 가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안을 한번 내 봐 주시지요.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하고 문체부, 문광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풍납토성의 가꾸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런 오래된 문화유적을 가진 곳은 개발이나 정비가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만 그렇거나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주변 주민들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약을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가측, 확실성도 없이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의원** 제가 보기에 백제의 수도입니다. 600년 서울이 2000년 서울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1조, 2조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기에 따라 좀 더 들 수도 있겠지요. 20년 동안 이렇게 홀드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과 총리님께서 제가 보기에 담합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 지역이 서울의 자랑으로, 그리고 걷기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토성을 따라 걷는 곳으로 충분히 만들어놓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총리님의 어떤 새로운……

○**국무총리 이낙연** 예, 도시재생사업과 혹시 연계할 수 있을지……

○**손혜원 의원** 그럼요.

○**국무총리 이낙연** 주민들을 위해서요, 그 방안을 포함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역에—목포나 통영이나 똑같이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인구는 주는데 아파트는 늘어 갑니다. 이 늘어 가는 아파트들, 30년마다 헐고 짓고 하는 이 아파트 문화를

우리가 후손들한테 그대로 전해 줘야 되는지……

우리 이 시대의 건축물은 없습니까? 계속 지금 짓는 아파트, 30년 뒤는 다시 헐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은 저도 전국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만약 우리 선조들이 지하에서 다시 눈을 뜨신다면 무엇을 가장 후대에게 야단치실까를 생각하면 일변이 건축 같아요.

○손혜원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놈들이냐’ 이렇게 선조들이 야단치실 게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매우 몹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총리께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풍납토성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손혜원 의원 들어가서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 문화가 사치일까요? 문화는 돈만 먹는, 예산만 먹는 소모재일까요? 아닙니다. 문화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화는 밥이고 문화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례들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예술로 또 그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할 때 국왕이 로비에 나셨습니다. 그래서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도시에 저 미술관 하나를 세우고, 세계에서 가장 설계비와 건축비가 비싼 프랭크 게리의 작품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건축비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스페인을 가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다케오 시립도서관, 4만 5000명짜리 도시에 연간 100만 명씩 저 도서관에 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40% 이상이 도서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자와 미술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도, 오래된 도시에 이 미술관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253개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괴산에 산막이길 만들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머물지 않고 걸어 갔다 배를 타고 그냥 옵니다. 그 안쪽에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계시는 상주 곳곳에 24개의 산성이 있습니다. 그 산성 중 하나의 이름은 견훤 산성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10세기 초반에 견훤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인가를 했던 이유로 ‘견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이 상주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상주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 지역구 곳곳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 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만한 그런 곳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다면 제가 여야 막론하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나서 보겠습니다.

저를 잘 활용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역구 곳곳이 관광지가 되게, 그리고 하루 자고 세 끼 밥 먹고 5만 원 정도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가지고 오는 ‘1·3·5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산 충분하고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여야 막지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찾아 주시고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아파트만 즐비한 전국 방방곡곡을 후손한테 내려 줄 수는 없습니다. 무형문화재들 지역별로 잘 살펴 주시고 그리고 예산 늘려 주시면 우리가 이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이 시대에 맞게 꽃피워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희상 손혜원 의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출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서초출 박성중 의원입니다.

남쪽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평양 방문을 통해서 상호 군사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이끌어 내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없이 비행금지구역 설정, 서해 평화구역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조기경보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서해5도를 지키는 우리 해병대는 섬 안에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서도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언제든 되돌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집권당 대표는 20년, 50년 집권하시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한편 추석 때 저는 지역민심을 광범위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따른 한숨 소리, 일자리 없는 청년과 가장들의 절망 소리, 물가와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한 탄식 소리 등 못살겠다는 소리가 비등했습니다. 이 정부는 새로운 악폐를 너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할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서 대통령 주변의 주사파 출신들의 영향력이 막강해서 청와대가 이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회의 명칭이라든지 대통령 연설이라든지 정책 등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 지금 청와대 참모들, 비서관 중에 과거 주체사상을 추종한 소위 주사파 운동권 인사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분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모 언론사에 의하면 64명 중에 23명, 36%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

이들 중에 공식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이는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말씀의 뜻을 짐작은 합니다. 의도를 짐작하는데요 뜻은 잘 모르겠고요.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지난 9월 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전원회의,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건 뭐 회의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지었겠지요.

○박성중 의원 운동권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과학기술자문화회의가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전원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지금까지 우리가 당정청 그런 거 할 때 전원회의 말을 썼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모두 다 모인다는 뜻에서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박성중 의원 북한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북한에서 전원회의라 사용합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뭐라고 사용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3개의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전원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자문화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사용합니까?

내 질문에 대답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전체회의라 사용합니까?

우리는 이전 정부에서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자문화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 이 정부에서 전원회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 이전에는 연석회의, 합동회의, 당정청 이런 말 썼습니다. 전원회의 말 안 썼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총리, 우리나라 국호가 뭐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한민국입니다.

○박성중 의원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평양시민을 상대로 한 연설 등에서 ‘남쪽 대통령’이라 말씀하셨는데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실 적

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고요.

○박성중 의원 지금 제 말에 답만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에 들어갔을 때 방명록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썼습니다. 경기장에서 연설할 적에는 친근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중 의원 그럴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면 ‘북쪽 위원장’ 쓰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거는 와 봐야 알겠습니다. 마는 그때 그 모임에……

○박성중 의원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에 기재된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박성중 의원 남쪽 대통령, 아무리 표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공동성명이나 노동당 방문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썼습니다.

○박성중 의원 핑계 대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박성중 의원 또한 대통령께서는 ‘빛나는 조국’ 대집단체조를 관람한 후에 15만 평양시민들에게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끝끝내 일어나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였다’ 연설했습니다. 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핵 개발로 대북 제재를 스스로 자초해서 300만을 굶어 죽인 사실, 이것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분단 기간 동안에 남과 북의 동포들이 모두 어려운 생활을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동포의 대통령으로서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우리는 300만을 죽인 사실이 없습니다.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까도……

○박성중 의원 이유 대지 마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많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씨 3대 세습을 위해서,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 민족의 자존심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박성중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동포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저한테는 변명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위로의 말씀이 어찌서 변명 일까요?

○박성중 의원 집권당 대표라는 분이 남북관계 경색이 보수 정권 탓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권 내의 공방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성중 의원 북한의 핵 개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살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최근에 어느 신문에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2만 건, 2016년까지 3000건이 넘는 대남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을 보수 정권 탓이라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북한의 도발을 보수 정권 탓이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 어느 집권당 대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인들 간의 공방에 대해서……

○박성중 의원 말장난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말장난이겠습니까?

○박성중 의원 집권당 대표라고 분명히 했는데 본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정부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 내부의 공방에 대해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 여론조사에서 총리께서 유력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최근 여의도에서는 총리 밥을 못

얻어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여러 식사자리를 많이 만든다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녁마다까지는 아닙니다만 약속이 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중 의원 아니 뎌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주로 여당 성향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식사 한번 사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한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인사청문회 때 저를 혹독하게 야단치셨던 의원님들도 모신 적이 있고요 경제학자 중에 요즘 텔레비전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분도 모셔서 했고요.

○박성중 의원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경제단체들도 연쇄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문화상 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박성중 의원 저녁마다 갖는 식사자리 비용, 총리 개인 돈입니까, 아니면 나랏돈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나랏돈입니다.

○박성중 의원 오늘 보니까 총리 연설문 작성에서 연설비서관을 제쳐 놓고, 거기에 한 대역섯 명 있을 텐데 민간 방송작가에게 한 1000만 원 지급하고…… 이것 세금 낭비 또 기밀 유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박성중 의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의원님의 질문 시간을 뺏는 게 아닐 겁니다.

한 달 평균 13.4건의 연설문이 작성됩니다. 연설문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두 명뿐이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떤 한 분을 우리 식구처럼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정식 직원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TO가 나질 않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 식구처럼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언론 보면 무슨 안보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안보 통일 이런 분야는 대통령의 직할 분야이지 총리한테 그것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성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연설비서관에, 소통메시지비서관에 직원들이 한 대엿 명 되지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실제로 글 쓰는 사람은 현재는 2명이고 최근에 1명을 들었습니다.

○박성중 의원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잘라야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체치고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13.4건 중에서 그분이 쓰시는 건 한 달에 2건 정도 됩니다.

○박성중 의원 밥 먹는 것, 연설 대리 쓰는 것, 이 모두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소통을 자주 하라고 그러시면서 또……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박성중 의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밥 먹지 말고 그러면……

○박성중 의원 그러면 총리 취임 후에 총리실 업무추진비 일체를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언제든지요.

○박성중 의원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시 심야시간대 또 법정공휴일 또 1인당 10만원 이상 고급 음식점, 와인 바, 이자카야, 술집 지출, 업무추진비를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식당들은 몇 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가서 봤는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보도를 놓고 보면요.

○박성중 의원 저는 청와대에서 3년 이상 두 번에 걸쳐 근무했고 서울시에서 20년을 근무했고 그 일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무부터, 업무 대표부터 업종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물겠습니다.

김영란법, 공무원들 접대 몇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식사는 3만 원이지요.

○박성중 의원 3만 원. 우리는 3만 원인데 10만원씩 청와대는 먹어도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1인당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10만 원 이상짜리가 많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제 심재철 의원님 보니까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4만 6000원까지 문제를 삼았던데요.

○박성중 의원 오후 11시 이후에 많이 먹는다고 나오는데, 그것 괜찮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심야에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1년에 서너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인들 모시기도 하고 행사 후에 한잔 더 합시다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성중 의원 231건이나 됩니다. 핑계입니다. 제가 청와대 두 번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시, 7시에 밥을 먹고 더 추가로 한다면 라면이라든지 이런 걸 사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안 그래도……

○박성중 의원 11시 넘어서 어디 술집에 가고 고급 음식점에 간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부적절한 경우는 개인한테 그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공휴일 백화점, 미용실 이런 경우는 청와대 법인카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제가 생각키로는 부속실이나 그 윗급에서나 가능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백화점의 경우는 어제 설명으로는 행사 준비 용품을 산다든가 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박성중 의원 그것은 극히 일부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도 전부를 감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청와대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야 합동조사를 한번 제의하고 싶은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해서 그 결과를……

○박성중 의원 저는 감사원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혹시 사기업에서 회계감사할 때 밤 10시 이후에 여러 가지 결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사기업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모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10시 이후에는 전부 사적 비용으

로 처리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기관입니다. 사기업보다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이 엄정하게 감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걸로 봅니다.

○박성중 의원 혹시, 워낙 잘 아시니까……

춘향전의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뜻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성중 의원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맛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총리,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세금은 누구의 돈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의 돈이지요.

○박성중 의원 국민의 피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지난 1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일자리 고작 3000개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 무리하게 해 가지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관련해서 보전해서 자영업자 7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 0~5세 아동수당 2조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0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한 철도·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총리, 공무원 증원과 북한 인프라 구축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현재 사는 서민들의 아우성 소리 안 들립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제든 경제부총리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만 54조라는 돈은 2년간의 예산과 두 번의 추경—추경은 전액을 다 포함한 것이 그렇고요. 직접일자리 예산은 2년 동안 6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3000개라는 건 어느 한 달의 전년 동월 대비 숫자를 말하는데요.

○박성중 의원 직접·간접 비용 다 들어간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에는 무슨 실업급여라든

가 재교육이라든가 포함되지요. 일자리 증가는 매달 달라지는 것이지요. 작년의 경우에는 하반기 평균……

○박성중 의원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31만……

○박성중 의원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는 매달 평균 11만 명 정도, 현재 취업자는 2690만 명입니다.

○박성중 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야당과 대화는 단절하고, 예산을 국민의 돈이 아닌 자기 쌈짓돈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 이쯤 되면 세금 도둑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노력할 겁니다.

○박성중 의원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띄엄띄엄 봐서 스토리를 모릅니다.

○박성중 의원 거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을사오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 무술년입니다. 현재 국민의 혈세를 무조건 쓰고 보자는, 그래서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미스터 문샤인 정부판 무술오적이 청와대와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원에 전수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말씀해 주시고요.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 책임총리 좋아하시는데……

○국무총리 이낙연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성중 의원 점수로 100점에, 지금 수행하는 게 책임총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몇 점 정도로 하고 계시다고……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욕심냈던 것에 비하면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장관 중에 직접 천거한 사람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천거한 분들 중에 검증으로 탈락한 분이 한 세 분 정도 있었고요. 다른

분들은 상의를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상의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유은혜 교육부총리……

○국무총리 이낙연 예, 상의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상의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직접 천거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자료를 복수로 갖다 놓고 서로 상의하고 이분이 좋겠다 또 검증을 해 보면서 이분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아까 법적·도덕적으로 열두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직접 그렇게 천거하셨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상의해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박성중 의원 제청만 하신 게 아니고?

○국무총리 이낙연 상의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박성중 의원 아침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국민 여론의 50% 내지 90%, 청와대 청원게시판, 기타 네이버 기사 댓글 이런 것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인의 과오나 부주의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독특한 경험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진 균형 잡힌 교육에 대한 생각 그리고 엄마로서의 교육부장관 그런 장점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 들어가시고, 유은혜 의원 나오세요.

(「의원이 뭐예요, 의원이!」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 안 한 사람한테 왜 질문합니까? 질문하지 말아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당 얘기를 들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도덕적 양심을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박성중 의원 당당하시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박성중 의원 당당하시다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성중 의원 저는 하도 많아서 입이 아파서 다 묻지 않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한 위장전입 간단히 해명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가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가톨릭입니다.

○박성중 의원 종교가 가톨릭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성중 의원 성공회는 가톨릭입니까? 또 다른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성공회는 저의 딸의 친구가 그곳에, 아버님이 신부님이셨기 때문에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박성중 의원 거기에 위장전입을 하셨다?

지금 천주교 세례명이 아녜스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성중 의원 천주교 교인이, 언제부터 천주교 교인이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러면 성공회 성당에 위장전입할 때도 천주교였네요? 성공회 교인은 아니었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종교와 관계없이……

○박성중 의원 제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종교와 관계없이 딸 친구의 집에 전입을 한 것입니다.

○박성중 의원 신앙을 판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기 종교는 천주교인데 성공회 신부의 집에 있다는 것, 그것도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종교를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종교시설에 위장전입 하는 것은 최초의,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신부님이 거주하시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성중 의원 신부님이…… 국민이 보고 판단할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성중 의원 자, 신부의 부인에게 부탁을 받아서 했다, 혹시 말 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느 언론을 보니까 신부가 ‘같이 그것 해서 옮겼다’, 같이 충분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자 그 신부님께서 오랫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지냈는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그 당시의 상황을 당신이 좀 언론에 이야기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말씀을 글로 주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다고,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마음에 양심을 두고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남편 사내이사를 보좌직원 7급으로 채용했는데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당시에 저희 비서는 남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고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된 사실입니다.

○박성중 의원 그만둔 상태도 아니더라도, 뒤에 다 확인하니까요. 검임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사내이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뿐인데 경제적으로 어떠한 관련도 없었습니다.

○박성중 의원 돈을 안 받았다고? 그것은 핑계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이 검임돼 있었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실정법 위반이 아니고요. 국회에 검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관실에 신고하고 처리 중입니다.

○박성중 의원 위의 법령에 하위로 권한 위임됐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여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야 협치의 최대 장애물로 보이는데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2일 날 임명장을 받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된 일이 더 이상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바는……

○박성중 의원 됐습니다. 더 이상……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교육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정책적 성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박성중 의원 들어가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과도하게 단언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님 나오십시오.

지금 현재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호남 출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칙으로 하면 25~26% 될 겁니다.

○박성중 의원 지금 호남에 살고 있는 분 한 10% 그다음에 서울 인구의 한 20% 정도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데 문제 삼을 때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비율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중 의원 그렇지요. 현재 따지는 것은 10%. 서울 인구로 봤을 때, 전국은 모르겠고요.

청와대 수석 중에 호남 출신 인사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수석 중에는 경북이 제일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경제 쪽에 특히. 실장급에는 두 분이 호남이지요.

○박성중 의원 청와대 수석 10명 중에 다섯 분, 호남이 50%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의원 현 정부 들어서 전·현직 장관급 중에 호남 출신은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박성중 의원 33%입니다.

육해공 삼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아주 힘이 센 여섯 분 중에 몇 %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박성중 의원 66%, 6명 중에 4명입니다.

서울시는 더 심각합니다. 부시장 세 분 100% 호남입니다. 1급 50% 호남입니다. 구청장 25명 중에 19명, 76% 호남입니다. 시의원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호남권 공무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관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지역에 따라 흐른다고 난리입니다. 호남특별시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시장을 경험하신 전직 대통령이 서울시장 하실 때 서울시 국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가 25명이었는데 그중에 호남이 한 분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정상이다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10년이라든가 또는 20년이라든가 이런……

○박성중 의원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이 가장 최악입니다.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 그 이전의 불균형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성중 의원 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지역감정 조장 의원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친가는 경남이고 처가와 외가는 전남입니다. 제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지역편중 인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단지 하나 변명처럼 말씀드리자면, 차관급 인사를 할 때 보니까요 각 부처 1급 이쪽에 호남 출신들이 잔뜩 재고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내부 승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적체도 있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박성중 의원 대통령께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탕평인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총리께서 이런 사항 개선시키거나 또 권고할 의향은 없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개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성중 의원 총리, 혹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래 핵심 에너지 자원인 핵융합 기술이 위협받고 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융합이라는 것은 수소 융합을 말하고요 원전은 핵 분열로 나온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은 원자탄, 수소폭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리고 그 융합, 국제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 한국이 여전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케이스타(KSTAR) 이야기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카이스트 원자력학과 지원자가 몇 명이라고 혹시 올해?

○국무총리 이낙연 지원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박성중 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중국은 1년에 몇 명 정도 이 관련 학과 석박사가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사람 숫자로 중국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한 900명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니까 원자력발전소에서 더 나아가서 4세대 원자로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핵융합발전소로 발전됩니다. 미래의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는 그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핵융합 기술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가장 핵심 10가지 기술을 전부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에 나올 것입니다.

드론, AI, 휴머노이드, 합성생물학, 유전자 가위 기술, 웨어러블, 우주발사체, 뇌과학, 우리나라는 완전 초보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R&D 예산이 사상 최초로 내년도에 20조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제가 전부 스크린을 했는데요 거의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드론과 로봇 산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베 총리는 로봇과 우주발사체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은 뇌과학, 고기능 합성수지, 유전자 가위, 이런 데 엄청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 주석·총리·대통령,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이런 회의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돼서 좀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국비기국(國非其國),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갈까 걱정스럽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용인시 수지에 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를 시작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이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생존권·인권 보장은 국가의 강력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 불법촬영 유포 문제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께서는 준비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가해자 처벌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데이트 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범죄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부위가 노출되어야 불법촬영 범죄가 인정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죽였는데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스쿨 미투가 확산되고 있는데 성범죄 교사들은 버젓이 교단에 서 있습니다. 몰카범은 10년 새 10배가 늘었는데 단지 9%만 실형을 받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35%가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직자의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은 낙제점이고 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입니다. 지하철 몰카를 찍다 걸린 현직 판사 감봉 4개월 받았습니다. 성범죄 경찰 35%가 복직하고 20%는 징계를 감경받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86.2%가 여성이며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앞서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성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법무부가 최근에 몰카범죄를 포함한 불법영상물 유통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대검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법정형도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법적 미비사항이 있으면 입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형법 제 297조를 개정해서 피해자의 자유에 의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강간을 재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정춘숙 의원** 그래서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성폭력 판단기준이 심각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기를 요구받고 반면에 피해 후에 모든 삶이 파괴된 피해자의 모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실 텐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혹은 적극적 동의 여부를 강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강간죄 성립요건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의원**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대신 비동의 강간죄 신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297조 강간죄 이외에 비동의 강간죄 또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상의 강간죄가 그동안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저항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규정이 되었고 또 해석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런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강간죄 성립요건을 변경시키는 문제인데 이것은 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신설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입증 책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범죄 처벌 법체계 전반과 비교해서 이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춘숙 의원** 상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협의설에 의한 성폭력 범주를 협소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여성 폭력 피해자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문제 해결은 피해자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도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침묵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CEDAW에서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절

차 남용 방지조치를 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피의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역고소는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5월 법무부가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정춘숙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매뉴얼보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면서 역고소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를 우려하는 것인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성폭력 사건은 그 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접증거도 수집이 돼야 되고요. 그러나 이것을 법에 규정해서 일률적으로 어떤 무고라든가 명예훼손 문제를 규정하기에는 개별적인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해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사 매뉴얼이 잘 지켜진다면 무고죄라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소위 역고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기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매뉴얼도 좋지만 사실은 매뉴얼은 상당히 임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무고죄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의원** 그런데 법무부가 이렇게 무고죄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허위, 왜곡된 통계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여성대상 범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조디 래퍼얼은 2013년 영국 검찰청이 17년간 접수된 5651건의 강간 신고 중에서 단지 0.6%만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결과

를 인용해서 강간에 관한 허위신고가 많다고 하는 대중의식이 잘못된 것이라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무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0월 27일 대규모 집회가 양측에서 예고가 되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무고와 관련해서 통계를 시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가 무고죄 전체 통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무고 내용별로 통계가 잡혀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정춘숙 의원**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고사범이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다는 건 의원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고 내용별로 분류화를 해 가지고 통계를 잡기에는 실무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춘숙 의원** 제가 그런 대답을 여러 번 들었고요, 장관님.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폭력에 의한 무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만 현재 이렇게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의 실제적 진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통계를 마련해야만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수사 매뉴얼에 따라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 밝힌 다음에 그것이 무고의 혐의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무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바꿨기 때문에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다거나 하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성폭력 사건 중에서 무고인 경우에 대한 통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정부가 2018년 6월 15일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습니다.

○**정춘숙 의원** 선포한 후에 정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찰 또 여성가족부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특히 여성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여성권익을 또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있는 여성계들로부터는 여전히 많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말씀하신 대로 화면 보시면 화장실 벽이, 이게 공중화장실 벽인데요.

화면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 휴지로 땀질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몰카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노, 노모, 기획물 이런 이름으로 불법촬영물들이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인 몰카 판매 규제 그리고 불법촬영물 웹하드 해비업로드 처벌이 지금 추진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50억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점검했는데 실적이 없었고요. 불법촬영 유포는 5년간 6배나 증가했는데 범죄기소율이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장관님, 지금 해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항의 집회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아니요, 요구사항이 가해자 처벌,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정춘숙 의원**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신고 즉시 위법성을 증명할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거물의 은닉 또는 폐기, 사후 재유포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PC, 스마트폰, USB 이런 장치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온라인 계정도 촬영물이 저장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불법촬영인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이동저장장치뿐만 아니라 개인 컴퓨터, 노트북, 웹하드 등 온라인 계정을 지금 적극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습니까마는 워낙 이 친구들이 신출귀몰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럴 뿐이지, 다만 구속수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구속 의견을 내는데 여러 가지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독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구속률이, 영장기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아까 법무장관께도 질문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법조계에 일하시던 분들이 이런 현실적인 여성계의 분노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춘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당국이 국제공조로 유포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국내 수사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 서버를 통해서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유통한 사람에 대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해서 유통 및 광고 이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래서 우리 경찰당국은 지난번 그 일 이후로 인터폴하고 그다음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가지고 아마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과 적극적으로 대화가 된 것 같고요. 조만간 미 국토안보부에서 한국 경찰의 수사팀하고 미국에 있는 웹하드 업체라든가 이런 쪽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춘숙 의원** 마지막으로 수사인력 확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17개 지역의 수사인력이 50명인데 1인당 연간 100건을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담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버성폭력 수사전담팀이 전반기에 50명밖에 되지 않아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97명, 그중에 여경 24명 포함해서 97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

경찰청에게 내년에 확충하는 경찰 인원 중에 일정 부분을 이쪽 수사에 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삭제 절차에 패스트트랙 도입해서 심의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3일로 단축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예.

○정춘숙 의원 바람직한 조치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압축적으로 질문드리면 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해서 저는 먼저 신속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조치 후심의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 차단을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조치가 아닌 강제삭제 조치를 위한 규제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이게 효과가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사전검열의 어떤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조치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피해의 확산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대정부질문답게 정책질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쿨 미투 심각한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정춘숙 의원 그래서 지금 이 스쿨 미투의 가해자인 선생님들이, 퇴출교사 10명 중 1명이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스쿨 미투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에도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면 사립학교의 교사들도, 특히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사들의 처벌 수준으로 높여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춘숙 의원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피해학생들이 지금 가해교사들한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해도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2차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또 주위에 되풀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를 막 시작해서요 곧 미투 관련한 학생들, 학교들 현장방문을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이나 또 이후의 장기적인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어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교육부 차원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법무처, 관련 부처 차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마련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방적인 측면, 성평등과 또 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또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1년에 15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1956년에 성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도입해서 지금 세계 최초로 성교육을 전 아동에게 의무교육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월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 달라’ 이런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성평등 교과과정을 정규교과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정규교과 신설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도 있습니다만 또 학교 현장에서는 정규교과를 신설해 달라는 과목의 요구가 너무나 많아서 그 우선순위와 또 정규교과로 포함시키게 되는 데 필요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정규교과목으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준비 정도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요구가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올해 1월에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을 금지한다 발표했다가 국민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는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유치원에서는 방과후 영어를 하고 있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정책을 국가가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아 단계의 발달 정도나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을 봤을 때 지식 전달의, 학습 위주의 방과후 영어가 아니라 놀이 중심의 방과후 영어로 허용하고, 과도하게 시수나 프로그램이 지식 전달로 운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잘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춘숙 의원 충분한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요. 이러한 입장들 국민께 널리 알리고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정춘숙 의원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보신 바와 같이 여러 부처가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충분히 다 여쭙지 못했습니다.

여성 폭력 문제는 전 부처에 걸쳐서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성폭력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알고 계셔서 총리님께서도 성폭력 지원 예산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검토하신 바가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계부처가 검토를 하고 있고, 참고로 아직은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바로 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6% 증액돼 있습니다.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그래서 기금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전환될 때 여성가족부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새로 부임하신 여성가족부장관님이 예산이 깎이는 것을 묵인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 다음으로 성차별 구조와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각 부처 내 성평등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면 보시면 사실은 지난 10년간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폐지되기도 하고 또 형식화되면서 성평등 정책이 굉장히 축소·퇴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성평등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몇 개 부처가 그런 여성 문제 전담, 성평등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처에도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 5, 6개 부처가 팀 내지는 과 단위의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정하는 법률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주무 부처도 고용부·인권위·여가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권한이 있는 고용부나 노동부 같은 경우가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신속도 떨어진 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반면에 피해자 지원부처인 여가부는 권한이 없어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춘숙 의원**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성희롱 예방 및 사건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서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도 여성가족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정춘숙 의원** 마지막으로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애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설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청와대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구성이었습시다라는 현재는 총리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건 총리건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에 세 보이는데 모르지만 막상 운영해 보면 1년에 한두 번 회의 할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 실효성이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상의를 하고 싶고요.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처,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를 두는 것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바로 각 부처

에 있는 성평등 전담부처와 업무상으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위원회를 현재처럼 총리 산하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꼭 높은 데 위원회 둔다고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너무 위원회가 많아서요. 제 산하에 위원회가 120개쯤 됩니다.

○**정춘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그리고 내각에서의 여성 장관 30% 이런 부분들을 이미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평등이 앞으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최근에 국제적인 조사에 따르면 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선에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시다라는 현실에서는 아직도 최하위권에 있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런 데 좀 더 힘을 기울이고 싶고요. 기왕에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장에까지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싶습니다.

○**정춘숙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자는 미투운동을 ‘혁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는 그동안 있을 수 있는 일, 혹은 안타까운 개인적인 사건쯤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투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용기 있는 폭로를 이어 왔습니다. 오늘 질의에서 들으신 대로 지난 1월 이후 우리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예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130여 건의 미투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분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으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에 대한 낮은 지위로부터 기인하므로 성평등한 인식과 높은 인권감수성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정춘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서 오후 4시 30분부터 산회 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해서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해서 승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태풍 관련해서 대책점검회의 참석 차 그렇게 허가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라북도 춘향이의 고향 남원 그리고 치즈의 고향 임실, 된장과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이용호 의원** 지금 취임하신 지가 1년 5개월 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5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열 추 5개월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대통령과 호흡은 잘 맞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혹시 그동안에 대통령과 의견이 좀 달랐던 점 이런 점 없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나 온도가 좀 달랐던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어떤 분야였고 어떻게 달랐느냐 하는 것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용호 의원**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발력도 있으시고 또 답변도 잘하시고.

그래서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총리께서는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항목에서 1

위를 기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망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 그러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조사를 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용호 의원** 기분은 좋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나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동안 총리들이 많이 대망론, 대부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총리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좀 더 분발해 주시고 하신다면 대망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충실하기도 힘에 부치는 정도입니다.

○**이용호 의원** 그동안 총리로서 국정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텐데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굳이 고르라면 양극화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 저도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도 절실하지만 워낙 복잡한 문제여서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여야 정당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길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쪽에 보입니다.

○**이용호 의원** 현 정부 들어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비판,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은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문제인 정부로서는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용호 의원** 현 정부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검토를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현장에서 제가 들었습니

다. 차등 적용 문제가 경제계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하는 정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차등화로 가자 하는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 않고 논의는 했지만 한 번도 채택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정부도 여러 가지 머리는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용호 의원 저도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좁기 때문에 지역 간 영향이 심해서 조금 더 준다고 그러면 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실제로 그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지난한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상으로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 뿐입니다. 만약 차등화를 한다면 어딘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올려야 될 텐데, 그래서 차등을 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것 아닙니까? 차등화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 이 점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용호 의원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최저선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 좀 더 여유 있는 데는 좀 더 많이 드리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또 더 많이 주란 말이나 또 이렇게 될 텐데요. 하여간 차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합의를 얻기가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용호 의원 요즘에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집값을 잡는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맞는 말씀인데요. 현상 유지인가

요 아니면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까, 폭등 이전으로?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제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기왕에 물음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데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기분입니다.

○이용호 의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금리인상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하고 또 행정부가 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 가까이 되고 또 한계기업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고. 금리인상, 집값 잡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초가삼간 태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양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올리는 쪽으로 해석이 돼서 세상을 좀 시끄럽게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가고 한미 간의 금리 역전 정도가 아니라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한은이나 금통위의 자율성·독립성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용호 의원 다소 느닷없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은데 최고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최근에 그런 법안도 나오고 논의가 있는 줄 압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마는 그러나 아래쪽의 임금을 올려서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위쪽이 더 높게 올라가 버리면 격차는 더 커지는 이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인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CEO들 임금 문제는 정부가 간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단 최근의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여러 가

지 말씀을 들어 봤는데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완화는 약간의 희망도 보인다, 일정한 단계에 가면 위쪽의 근로자 임금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할 정도만 올라가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사정 간의 대화가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임금격차를 점점 완화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고는 청년 취업난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임금격차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물음을 주신 최고임금제 문제는 조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이용호 의원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1940년대—대공황 이후입니다만—그때 최고세율을 88%, 그러니까 소득상한제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88%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스위스에서 2013년도 일명 ‘살찐 고양이법’ 이거 해서 CEO들의 임금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일본도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임직원의 평균임금은 그 지방 공무원 평균임금을 웃돌 수 없다든가 그런 제한을 둔 사례도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하여튼 우리도 바닥이 있으면 천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호 의원 이것도 또 느닷없는 얘기인데요. 로봇세 도입 한때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얘기를 들어 봤고요 구미 선진국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세금을 물리려면 세금의 대상 또 어느 정도가 좋으나 이렇게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결론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해 가고 사람의 일자리를 뺏으니까 당연히 로봇으로 인한 소득의 증가, 수입의 증가에는 세금을 물리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이론인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돼야

될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이것도 최고임금제처럼 한번쯤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앞서 나가면 마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데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마는 대체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맨 처음 산업혁명이 시작될 적에 농업 노동자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걸로 걱정했었는데 그분들을 공장 노동자로 수용을 해서 오히려 더 노동자들의 수입이 좋아진 역사적 경험은 있습니다.

단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의 경우는 인간의 일을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마구 대체해 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큰 변화와 그에 따른 고통이 밀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우리나라도 그 단계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0.97, 사상 초유의 지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출산율이 1.72일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일본은 출산율이 1.42일 때 저출산 전담 장관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사실은 바로 그런 비상한 마음 때문에 대통령직속의 저출산위원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실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몹시 마음이 급합니다.

기존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수용되지 못하고 또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의식 또는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정책만으로 유도해 가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런 문제들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11월까지의 내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지금 저출산 컨트롤타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출범이 13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계속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작동이 멎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위원장이 대통령……

○**국무총리 이낙연** 그리고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맡고 계십니다.

○**이용호 의원** 대통령이 요즘에 남북문제 이런 걸로 너무 바쁘신데 출산 문제는 좀 내려놓고 다른 분한테 넘기는, 새로운 기구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얼마 전에 저출산위원 한 분이 굳이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기고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요.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이분이 저출산위원으로 있는 건 적절치 않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좀 이상하군요.

○**이용호 의원** 어느 분이 위원회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6년 이후에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만 153조 또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관련 제도가 2000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2000개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금 과장되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초등학생돌봄 사업 이게 어느 부처 담당인지 아십니까? 총리께서……

○**국무총리 이낙연** 초등학생돌봄은 지금 보건복지부 아닌가요?

○**이용호 의원** 예, 보건복지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여가부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아, 예.

○**이용호 의원** 이렇게 같은 이름의 사업을 3개 부처가 나누어서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개에 달하는 출산정책을 과감히 줄이고 낭비 요인을 좀 없애서 현금지급 정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출생과 동시에 일시금으로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지금의 정책과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무상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매달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한 결국은 비슷해지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많은 정책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이 쓰이는데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용호 의원** 저는 행정비용에 거의 새 나가고 담당 공무원 늘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수 요자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27조가 출산 관련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이것 27조를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270만 명한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현금을 준다고 또 출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유값이 없는데 무슨 여러 가지 정책,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무원 출산율 이걸 국민 전체보다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세종시 출산율이 작년엔 1.67, 전국 1위였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세종시의 경우는 여성 본인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남편의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많고 교원이 많기 때문에 비율상으로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입니다마는 출산 장려가 성공한 건 딱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와 전라남도 해남입니다. 해남은 온갖 지원정책을 다 쏟아부어서 한때는 3.46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세종시는 여성의 직업적인 안정 또는 남편의 직업적인 안정 이것이 작동한

사례입니다.

우리 출산장려 정책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제까지는 해남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세종처럼 여성의 고용안정, 출산과 보육을 하고 돌아와도 내 일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성평등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랑스나 스웨덴이 바로 그런 케이스고요. 거기에 더 얹어서 예를 들면 스웨덴은 스무 살까지 의료비를 무료로 한다든가 또는 대학까지는 그냥 공짜로 다닌다거나 이 정도까지 파격적인 정책을 써서 출산율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도 우리 국민들의 동의라든가 정책을 그만큼 정교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따를 겁니다. 제가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총리님이 기구 만들어서 대표 하셔야 되겠는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세종시가 잘해서 높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들의 직업 안정성,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또 노후 보장이 되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공무원 수준으로 바꾸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말하자면 공무원이건 교원이건 간에 경력단절 자체가 없어지는, 출산과 보육이 경력단절 사유가 되지 않게 하는 그 정도까지 가야 출산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호 의원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출산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호남 출신이고 그래서 호남에서 더 기대가 크고 또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 준 고장입니다.

다름 아닌 새만금 공항 얘기입니다.

새만금이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산업·물류·항만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항이 없는 새만금 이것 양꼬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해서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신속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이것 약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받아 가면서 진행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문제는 2023년에 거기에 세계잼버리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타 이런 것 면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사안 하나만 놓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잼버리대회까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든다는 건 무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오게 될 수만 명의 청년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사실 전북이 한국중공업이 철수하고 또 지엠이 그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호 의원 서남대가 지난번에 폐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민심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총리께서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알겠습니다.

서남대학의 경우는 공공의료대학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은 충격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군산의 경우에는 아직 그만큼의 확실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대통령의 또 다른 전북지역 공약이었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사실은 그 지역이 지리산과 소백산을 끼고 있고 굉장히 국도가 아름다운…… 유홍준 씨가 쓴 ‘문화유산답사기’에 보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그쪽을 꼽아 놓고 계시지요.

우선 전라북도에서 기본계획 같은 것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관광객 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발

전 차원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요, 지금 지역 사회에서는 열망도 크고 기대도 큼니다. 총리께서 직접 체크해 주시고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이용호 의원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나선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만 제대로 된 공공의료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 소재 지역에 있는 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수준으로 격상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남원의료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 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물론 남원의료원을 저희들이 지방의료원 중에서 협력병원으로 편입해 쓸 것은 기본적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립의료원의 분원으로 할 것까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런 정도로 올려놔야지 공공의료대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1000조 원 정도 규모의 주식 대여를 공매도 세력들한테 줬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것은 조금 숫자는 잘못됐습니다마는 지금 공매도에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 결국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착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하는 겁니까? 공무원연금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다른 몇 가지 연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래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주식 대여 자체가 투자가 아니고 또 몇 푼 수수료 얻자고 연금의 공공성이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식 대여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형태 자체가 장기투자가 돼야만 주식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비교적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기금들은 단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낸 돈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의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요.

○이용호 의원 지금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대여했다, 이것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나 교사·군인연금은 안 하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것 주식 대여 안 합니다. 이걸 좀 바꾸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저희 보건복지부까지도 함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큰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할 기업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원칙 속에 공매도라든지 공매물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안 하면 그만인 것이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00조 원을 빌려주고 고작 766억 원을 얻어서 수익률로 따지면 0.008%. 그런데 문제는 공매도를 주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자동으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굉장히 침체하게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외국의 많은 펀드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사실 소탐대실하는 것이고 원인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걸 검토하셔서 국민들의 여망대로 제발 좀 노후 돈 가지고 위험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대여한 총액은 연간 6000억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그 안에 쌓여 있는 잔고들이 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잔고를 다 집계해서 1000조라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6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해 공매도 이루어진 것에서 국민연금 주식이 사용된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더구나 주식 대여를 1.8%밖에 안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래서 주식 대여 중지하고 기존에 나가 있는 것 회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는 2009년의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사태 진압에 대해서 ‘공권력의 과잉 행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사과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도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먼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데요. 지금 소 취하 여부 등의 구체적 소송 수행 방안은 일차적으로는 소송 수행청인 경찰에서 결정하게 되

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을 하게 돼 있고요. 만일 경찰이 서울고검에 소취하 등의 소송 지휘 건의를 하면 서울고검과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에 의견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타당성 등을 검토해 가지고 승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법무부로서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그것 충분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용호 의원 낙관적으로 받아들여도 좋은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일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청인 경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용호 의원 당시 경찰이 공권력을 과잉 사용한 점, 노사 간의 민형사상 조치가 종료된 점 그리고 최근 해고자 전원 복직이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서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님. 문화체육부장관님, 제가 명칭을……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2032년에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를 하자 이렇게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용호 의원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북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항만이나 도로, 철도 이런 게 굉장히 인프라가 낙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십이삼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될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회의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용호 의원 북한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게 하자고 내놓으면 그 위원회에서 해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실제로 올림픽현장에 따르면 7년 전에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이용호 의원 그러면 2025년인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지 공동 개최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문광부가 뭐가 로드맵이 있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우선 시설 관련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북한에는 능라도 5·1 경기장 굉장히 큰 시설이 있고요. 능라도 5·1 경기장을 포함한 주경기장 8개, 보조경기장 11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경기시설이 어느 정도 현대화돼 있는지 또 아니면 노후 상태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등등은 좀 더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걱정하시는 인프라 문제는 좀 더 다각도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가 가능하겠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우선 런던 올림픽 이전 2008년에 베이징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2010년에 런던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리우에서 2016년에 열렸는데 아시아, 유럽, 남미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다음에 도쿄 올림픽이 2020년에 열리고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24년 그다음에 LA 올림픽이 28년 이렇게 열리면 다시 또 아시아, 유럽, 북미 이런 순서로 개최되기 때문에 2032년에는 아시아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개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신청을 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또 대북 제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걸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러나 올림픽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일 큰 가치 중의 하나가 평화를 구현하는 것인데,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것인데 그 점은 이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크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고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가 해체될 수 있는 중요한 올림픽이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IOC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 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영향도 받을 것이고 또 유엔과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IOC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와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실현가능하기만 한다면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해체하면서 통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올림픽이 될 거라는 점에서 IOC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일각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있는데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꼭 유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환경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건 아닌데요, 전라북도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계획 얘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지금 용역 중이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용호 의원 1965년에 섬진강댐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설치했어야 될 도로인데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챙겨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김은경 예, 지금 섬진강댐 주변지역 교통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하고 현재 이 사업의 업무 소관하고 근거법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이게 시간이 막 돌아갔는데 이것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20초 남았었는데 이게…… 계수 체크하시는 분 다시 20초 주세요.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태안 출신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5개월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 기대가 컸고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기 3분의 1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 그 기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실패, 부동산 폭등, 최저임금 실패, 주 52시간 실

때 이에 따른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인해서 고용참사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교육 실패와 코드인사 및 인사의 사실상 실패를 여러 곳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 났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남북문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남북문제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부의 개혁과 튼튼한 경제성장 없이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고 국민을 편안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격론 속에서 장관에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성일종 의원 아까 우리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장관께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위장전입 했고 부끄러운 것 많습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우리 장관께서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더 잘 살 걸’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말에 변화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인사청문을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성찰과 반성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법적·도덕적으로……

○성일종 의원 자, 짧게 하세요. 여러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그거 아까 다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짧게 짧게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께서 솔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장전입 한 것 맞고 또 여러 가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종 의원 보좌관 쓴 것 맞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렇게 국민한테 사과하

고 가야 합니다.

여기는 야당 의원도 묻고 여당 의원도 묻고 까다로운 국민이 묻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가야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장전입과 또 부족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과도하게 단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성일종 의원 어제 취임식을 하셨는데 취임사를 직접 쓰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그 취임사에는 우리 장관님의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 교육부를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고려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장관님께서 취임하셔서 이 무거운 중책을 맡으셔서 앞으로 내가 중요한 세 가지 정도, 꼭 해야 될 일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먼저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을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래 교육,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은 교육부 혼자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듯이 미래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련 부처 간의 논의를 통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큰 항목만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리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내년도에 출범시켜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 두 가지 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려 갈 생각이구요.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잘 챙겨서 하려고 합니다. 고교무상교육이나 온종일 돌봄체

계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챙겨 나가고자 합니다.

○성일종 의원 예, 좋습니다.

아까 오전에 대답을 하실 때 ‘총선 출마와 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이 아니더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어젠다를 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 이러셨습니다. 지금 장관님 1년 3개월 남았어요, 내년 총선까지. 그렇지요? 그러면 1년 3개월 내에 이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마 대통령 임기 중에도 완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지 지난 정부에서도 수십 년을 우리가 함께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왔지만 완성시키지 못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한 장관의 임기 내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모두 완결적으로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 자, 그러면 지금 모든 국민은 유 장관님한테 ‘우리 교육 다 바뀌다오’, 그래서 김 상근 장관이 경질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 와서. 그런데 지금 이 패러다임 바꾸고 또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그런데 이게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이 직을 내려놓고 이것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을 해내겠다고 하는 각오도 없이 이 자리를 맡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 않습니다. 완성할 각오로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많은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1년 3개월 남았는데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물으니까 대답을 피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고 있으면서 어찌…… 내 직을 던져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교육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의 표시라도 나타내고 해야 유 장관님께 신뢰를 가지고 국민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 충분

히 공감하고요. 제가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저의 해임과 임명은 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성일종 의원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장관의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 자리에서 묻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일종 의원 총선을 안 나갈 각오로, 안 나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 모든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직을 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 임기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지금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그랬어요. 한시가 부족합니다. 위원회 만든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실행하기까지는, 제가 연말까지 구성해서 실제로 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모든 계획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면 검토하고 계획을 짜고 수립해서 시행하고 피드백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3개월 동안에 가능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1년 3개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의원 완결하는 게 아니라 장관으로 와서 이걸 어디까지 확실하게 끌고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만드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위원회 구성은 연말까지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러면 어떤 어젠다로 세팅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미래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각 부처별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논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면 각급 단위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의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이 위원회에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 겁니까? 고민하신 흔적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던져 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관련 부처 전체와 밖에 있는 기업인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또 IT 이런 과학기술계의 인재들을 실제로 미래인재 양성 시스템, 미래교육위원회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

○성일종 의원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교육…… 참여시켜서, 그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요.

○성일종 의원 장관은 그 구체적인 선명한 그림을 내셔야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러니까 관련 부처와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성일종 의원 장관의 확실한 선명한 계획을…… 이 위원회를 만드신다면요? 만들면 장관께서 여기에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니겠어요? 그 구상이 이미 다 끝났어야 돼요.

장관은 실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일종 의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 와서 사람들만 모아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검토하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해

서 장관의 생각을, 국가적인 목표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또 민간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미래교육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부처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 정도는 모든 의원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수장으로 와서 이런 사람들 모아 가지고 우리의 학교를 어떻게 바꿀 건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 학생들한테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구체적인 선명한 그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그리고 학령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그것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같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에서……

○성일종 의원 좋습니다. 지금 그런 것 장관들이 다 했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면 ‘교육부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김상곤 장관도 그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께서 오서 가지고 이 위원회를 만든다 그런데 장관이 위원회에다 이러이러하게 가자라고 어젠다를 얘기를 못 해요. 사람들만 모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것 다 알고 있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 총선 1년 3개월 남았는데 나갈 거냐 말 거냐라고 묻는데 1년 3개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던질 각오를 하고 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야당 의원들이 그 지적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직을 걸 각오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교육의 전환을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그 위원회에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특히……

○**성일종 의원** 그러니 국민들이 지금 ‘총선에 나갈래, 안 나갈래?’, 안 나가면 더 신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고민하셨는데 1년 3개월 가치고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묻는 게 다음 총선을 나가면 스펙 쌓기이고 이력서용 하나 더 추가하는 거니, 장관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오전에 비켜 가셨습니다.

분명히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 모든 것 다 내려놓을 각오 하지 않고……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도 모든 걸 내려놓을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임하는 게 아니라 장관은 현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른 장관들이면 이 얘기를 안 물을 겁니다.

좋습니다. 미래형교실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이 콘셉트가 뭐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여러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마치 교도소와 같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과 학교는 시대적 변화에 전혀 조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은 학교 교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의 공간을 만들고 필요한 새로운 공간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혁신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이미 교육감들을 통

해서 여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있는 특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학교……

○**성일종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이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던 것하고 유은혜 장관이 고민해서 더 특성화하고 더 발전시키고 진화시킬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뭐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하고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전국 단위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또 오히려 낙후된 지역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실 하나, 교실 하나 이것을 아이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모델 삼아서……

○**성일종 의원** 장관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장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장관 취임사에서 미래형 교실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미래형 교실이 도대체 뭐냐? A타입 B타입 C타입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의 교실은 책상을 앞에 두고 아이들이 종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입식……

○**성일종 의원** 지금 그것 모르는 학부모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교실구조부터 바뀌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미래인재, 우리 아이들이 커 나갈 사회는 협업하고 다양한 삶을 존중하고 서로 창의성을 인정하고 이런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의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장관의 전문성이 무척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학교 교실 자체가……

(「장관을 무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학교 교실 자체가 지금과 같은 구조이면……

○**성일종 의원** 조용히 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교실이 바뀌고 있고 도서관이

바뀌고 있고 학교 공간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교실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교실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교실이 책상을 앞두고 종으로 앉아서……

○성일종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선생님께 설명 듣는 수업이 아니라……

○성일종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이들이 체험하고……

○성일종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함께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실 구조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미래형 교실은, 저는 교육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잘하는 사람 수선에서부터 해체하고 조립하고 컴퓨터 마음껏 하게 해 주고, 화학 잘하는 사람 실험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내 줄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기본……

○성일종 의원 지금 소프트웨어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기본 인프라를 까는 것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예산들도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런데 이게 취임사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취임사에서 장관께서. 취임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한테 선보인 겁니다. 그러면 ‘미래형 교실에 대해서 내 그림이 이렇다. 화학 분야는 이렇고 정보통신 분야는 이렇고 의학 분야는 이렇고 농림 분야 어땠다’ 이래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고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게 각각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의원님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미래형 교실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가서 보시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총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그런데 한 2만 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2만 개가 넘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성일종 의원 초등학교가 6000개고 중학교가 3000개고 고등학교가 2000개입니다. 1만 개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 제가 물음을 어떻……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가면서 정말로 고민했는가? 30년 100년 뒤에 먹고 살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데 장관은 의원직에 대해서 던질 거냐 안 던질 거냐 물어보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셨고, 지금 취임사에서 얘기했었던 이 두 가지 어떤다만 가지고 제가 질문했는데 저하고는 영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질문한 게 틀렸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가진 소신과 계획과 추진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평가도 받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다른 장관하고 달라서 교육부장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지금 본인의 영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1년 3개월 뒤에 출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장관으로 갔으면 이 나라의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하고 던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묻는데 이것의 핵심이 아니라고 비켜 가는 장관의 자세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교육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 현장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과의 소통과 또 정책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이 직을 수행하면서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교육과 관련

된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부터 실행하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오늘 유은혜 장관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또 전문성이 풍부하다는 청와대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언제…… 여기는 오면 바로 실행하고 프로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무얼 듣고 고민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상 장관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살아오면서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따가운 비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제 개인의 부귀영화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해 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장전입 비판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사과부터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성일종 의원** 노동부장관님.

(「교실이 교도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세요, 나가서」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여당 의원님들 너그럽게 하세요. 옛날, 더 하셨잖아요. 뭐 여당 됐으면 그래요?

장관님, 최저임금이 16.4%, 10.9%가 올랐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 이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올라간 논리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분에 그다음에 소득분배 개선분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그 당시는 안 계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성일종 의원** 이것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이나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을 토대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귀족 노조의 요구에 이 정부가 대답한 겁니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금을 결정할 때는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기업적인 여건 모든 것들 다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성일종 의원** 그런데 16.4와 10.9%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법에 보면 유사근로자의 임금·생계비·생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분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분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한국이 경제성장률 예측률이 3.1%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0.6%인데 1.64가 최저임금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1.4인데 미국은 0.42% 올랐습니다. 호주가 2.6인데 0.74 올랐고, 다 이렇습니다. 유독 한국만 어떻게 했는가? 18년도 경제성장률 2.7%인데 16.4가 올랐고, 19년도가 2.8%인데 10.9% 올랐습니다.

이것을 올릴 때 연구보고서 1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러 가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아니, 세계 여건 다 고려하셔야지 이 건에 대해서 이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2.7%로 한국은행에서 예측을 했는데 16.4를 올리냐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의원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과거 10년간의 경우를 되돌아봐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해 왔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장관님 얘기 틀린 겁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가 4위예요. 내년 인상되면 저희가 3위입니다, 여기에서.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다음이에요. 우리가 낮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임금격차는 굉장히 큼니다. 임금격차가……

○**성일종 의원** 아니, 이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저임금의 평가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래서 과거 10년을 봐도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결정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일종 의원**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경제에 충격 줄 수 있는 것을 용역 한 번 없이 했습니다.

공익요원을 넣었으면 정부가 공익요원한테 국가 운영 방향이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하고 조정을 요청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법에 보면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지금 법만 얘기하실 겁니까? 경제가 법으로 되는 겁니까?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당시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노동생산성 증가분까지 다 고려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장관님 새로 오셨는데 OECD 국가에서 업종별 다르게 하는 나라가 12개입니다. 지역별로 또 다르게 하는 게 12개고, 연령에 따른 게 11개국입니다.

우리 지금 심각하지요.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것?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연령별 그런 차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도 참여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농어촌이 직격탄 맞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

○**성일종 의원** 지금 최저임금 올라 가지고 농어촌이 직격탄 맞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성일종 의원** 농업 임금이 지난해 대비 13% 상승을 했어요. 소득은 8.7%가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농촌에 와서 어촌에 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다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1만 1000원입니다, 숙식비까지 계산하면.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 1만 10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농촌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 대한민국 모든 곳에 최저임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포함해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이 최저임금이 운용되고 있는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외국인노동자가 소득주도성장의 최대 혜택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성일종 의원** 외국인노동자도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그보다 우리 국민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농어촌 문제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 문제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의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다 망가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는 이 실패한 정책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이 정부도 실패한 정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언드립니다.

실패한 정책을 조속히 인정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성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



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대정부질문이 처음이라서 많이 설렜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저녁에 급하게 좀 마무리할 것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자면서 꿈을 꿴어요, 오늘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진행될까. 다행히 정책 중심의 차분한 토론이 되어서 ‘아, 내가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구나. 유은혜 부총리도 편하게 마음먹고 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현실은 꿈과 정반대입니다.

보건복지 위원이라서 저는 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리고 원격의료 문제, 메르스 사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정책 토론과 질의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역시 강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의 대정부질문이 과연 우리 국회의 품격을 높이고 정치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법 122조, 대정부질문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정 전반과 그리고 특정한 국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인사 문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서 인사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기 위해서는 확인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든지 새로운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후보자였던 부총리에게 어떤 의견들을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된 제2의 인사청문회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다시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 최초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의원이다, 그것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2006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몇 가지가 중첩되었을 때 얼마나 큰 정치적 피해와 국민들의 오독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위장전입 문제, 잘못했지요. 개인의 사익과 어떤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옹드려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또 사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의 의도를 알면서도 왜 그렇게 당당하냐고 얘기합니다. 관중석에서는 뻔뻔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일국의 부총리에게 그런 언사를 쓸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품격 있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제2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적어도 국회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자체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많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의원들의 숫자 그리고 하루 종일 국정을 비우고 이 자리에서 토론해야 되는 국무위원들의 처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에서처럼 이제 뭔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서 아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정부질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도 그리고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논란에 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모질까요? 저는 학부모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에서 혹은

교육계의 일각에서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6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났습니다. 여기 있는 국회의원님들은 전문성이 없는 분들입니까? 적어도 서당 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6년 정도 일했으면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 미래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까? 보완하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의 제일의 첫 번째 자질이 전문성입니까? 전문성이라는 것도 저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제의 진리가 내일의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함정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국민들의 다기한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교육 문제는 전문성 플러스 소통 능력, 정부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더 장관의 자질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의 방위상이 여성입니다. 프랑스의 국방장관 역시 여성입니다. 스페인의 국방장관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인 게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분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합적인 균형감각과 그리고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결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각과 잣대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평가의 잣대에는 56세의 젊은 여성이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장관을 겸임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시라니까……)

제 시간입니다.

(○함진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와서 질의하시고 시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계에서 몸담지 않았던 사람

이었기 때문에, 교육계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유은혜 장관의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작용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유은혜 장관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간곡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해 주십시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의 삶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63%에서 70%로 확대 강화했고요. 기초연금 역시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임기 내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어르신들의 노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지난달부터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획기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습니다.

너무 몰아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만큼 우리의 복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동안에 쭉 이뤄져 왔더라면 지금의 부담이 덜 했을 텐데 지체된 복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깐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기동민 의원 저는 집권 초반기에 정권에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국민적 시선이 집중되었을 때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복지정책과 보건정책 그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을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맡겨 두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합니다.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 대단히 멀고요.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실질적인 첫걸음을 뗐 것에서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티글리츠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날

의 세계가 비단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는 또 어디까지 더 가야 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여러 복지시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체감을 하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기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 없애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꼭 그런 일이 현실에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1%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강화하기로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10·4 선언에도 합의했지만 그렇지만 지난 11년 동안,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11년 동안 사실상 남북관계가 차단되었고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개혁과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인도주의 실천사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리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야는 조금 더 정부로서 속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절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여성이나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몹시 더디고요. 또 여성들의 건강상태도 몹시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다른 경제협력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합니다.

○기동민 의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고요. 이런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지난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모자보건·영양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고려사항들이 있어서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인 고려를 거쳐서요 국내적으로나 또 국제적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저는 그 신중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신중함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더 믿어 주는 측면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신중함 속에서 실기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에 저는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과 보건·의료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은 향후 남북관계 또 다른 분야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뭔가 끈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협력 끈이 될 수 있다는 주변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텔레비전으로 보시고 계실지 모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는 데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 가셨을 때도 유엔사무총장께 유엔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좀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의원 지혜롭게 해 주시되 동력들을 잃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동민 의원 애초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원래는 보편적으로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위 10%는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무력감과 절망감을 많이 느꼈습

니다. 물론 예산을 타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 흥정과 타협으로 일관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로 인해 드러나는 후유증은 너무나 많습니다.

선별적 지급 함으로써, 10% 내에 드는 사람들 중에 맞벌이 부부들의 비율이 6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고용형태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민원 전화들이 꽤 많이 와요. ‘어렵게 다시 경력단절에서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정 임계선을 넘어서는다고 주지 않는다, 구제할 방법이 없겠느냐?’ 물어보니까 ‘그러면 계약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몰참니까? 10만 원 받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어렵게 출근하고 있는 또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분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 주신 대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동수당 탈락률이 외벌이에 비해서 맞벌이 부부가 두 배 정도 높은 상태이고요.

아까 하위 90%만 그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 연령대, 아이를 낳는 연령대는 소득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 보면 90%가 아니라 한 94%까지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기동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말하자면 6%를 골라내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데 또 엄청나게 돈이 들고요. 지금까지 들어간 행정비용이 1600억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안 줌으로써 절약되는 예산이 650억인데 650억 아끼다가 1600억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이런 아이러니를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지혜롭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국회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걸러 내기 위한 그런, 시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동민 의원 문재인 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선택진료비 폐지했고요. 4월에 간초음파 보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에 상급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서 10월에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하고도 차질 없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익으로 보면 4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국민 의료비가 4분의 1 수준인 10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 전체의 의료비 절감은 지난 1년 사이에 1조 3000억 원 정도가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것 보면 실제로 치매를 포함해서 중병을 가진 부모를 모셨던 자식들의 실감나는 경험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싸졌더라 하는 얘기가 올라오는데요. 정부가 한 일 중에서 참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동민 의원 손에 잡힐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인데요. 5년간 한 36조 원을 들여서 63% 수준에 있는 것을 7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장성들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반의 조치가 있는데요.

국고 지원을 20%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3.2%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적립금 21조 정도가 쌓여 있는데 그중에 한 11조 정도를 보장성 확대하는 데 쓰겠다, 그리고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뭔가 재정 혁신들을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책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약속대로 지원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법에 정해진 만큼 국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 사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원을 늘리도록 해 가겠습니다.

현재는 국고 14%, 기금 6%, 20%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계속 미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최대한 법이 정하는 지원율을 맞춰 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더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재부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올해 13.9% 정도로 가져갔더니 기재부에서 맞춰 준 게 13.6%거든요. 14%의 13.6이 아니라 20%의 13.6입니다. 국고 지원에서는 실제 2년 연속 10% 이하의 실질적인 지원율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굉장히 큰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복지부가 그리고 또 기재부가 잘 협상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재인 케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성공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의료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본인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33%가 넘습니다만—그것을 더 낮춰드림으로써 국민들께 기왕에 성공적인 의료보험을 더 이렇게 실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기동민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성된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문재인 케어 덕에 모든 국민이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키고요. 기초연금·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줘서 중장년도, 어르신도 노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입니다. 완성된 포용국가는 곧 달라진 국민 삶의 모습입니다. 온 국민이 기대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힘 있는 곳이 필요한 곳에는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불신이 서린 곳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기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임이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임명에 있어 7대 비리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위장채용, 위장회계, 위장으로 점철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들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입니까?

국민들은 또 묻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광화문광장을 꽉 채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살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절규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려야 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현 정부는 최저임금 올리고, 생계비 지출 경감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펼쳐서 모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신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역대 최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주변의 40대 가장은 실직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동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니 임금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과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수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도기라

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임금을 많이 올려서 경제가 성장할 것 같으면 1만 원이 아닌 2만 원으로 할 것이지, 왜 1만 원만 합니까? 시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님께서 어느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다음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 원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의 노동에 대하여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은혜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장관님, 기동민 동료 의원님께서 품위를 지키라고 하도 말씀하셔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는 유은혜 장관님이 여성이라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 교실이 지옥 같다’라고 했던 이 말씀을 아셨는지 방금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반드시 한번 꼭 물어봐 달라고. 교도소 갔다 오셨는지, 그리고 교도소는 어떤 분위기인지, 현재 학교 교실을, 그나마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것을 교도소에 비교했는지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학교가 교도소와 같다고 드린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학교 교실에 대한 평가였고요. 그것은 확실적인 주입식 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학교 교실의 구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토론식 수업을 해야 한다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주입식 수업에 익숙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학교 교실에……

○임이자 의원 장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요, 그것이 감옥이다 이게 아니고요.

○임이자 의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지금 웃을 일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취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학교 교실의 구조, 학교의 여러 공간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학교 교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이자 의원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지옥 같다는 것은 장관님의 생각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구조가 지금 그렇게 있는 부분을 갖다가 미래의 교실로 혁신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지옥 같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임이자 의원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팩트만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전입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임이자 의원 아니, 팩트 체크만 합니다.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허위신고하셔서 정치자금법 위반 시비 지금 걸리고 있지요? 잘못했다고 오전에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지금 기재에 오류가 있어서 선관위에……

○임이자 의원 어쨌든 잘못하셨지요? 허위신고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허위신고가 아니고요,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겁니다.

○임이자 의원 아니,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0회에 걸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러니까 기재가……

○임이자 의원 그것 잘못했다고 오전에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부드럽게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사과를 하신 것을 갖다가 부인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아니요, 오전에

그 말씀……

○임이자 의원 어쨌든 잘못하셨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행정상의 오류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이자 의원 아니, 어떻게 그게 행정상의 오류가 있습니까? 허위로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허위신고가 아니고요, 내역을 기재하는데 저희 행정비서가 기재를 잘못된 것으로 지금 선관위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공공기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팩트 체크만 합니다, 제가. 뭘 어쨌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에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가 피감기관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문체위 소속이었을 때 피감기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임이자 의원 그 기관의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3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민영화 저지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반대는요……

○임이자 의원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임이자 의원 했지요.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의 건물 중에서 2016년 2월 3일 203호에 입찰한 적이 있고 그날 또 포기한 적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혀지고 소명했던 얘기입니다.

○임이자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여기서 궁금한 부분을 묻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것은 저희 온비드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자, 그러면 이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을 텐데, 어쨌든 낙찰받아서 했을 텐데, 누가 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희 의원실 보좌관이 했습니다.

○임이자 의원 보좌관이 했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이름으로 한 계약을 장관님은 전혀 체크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여러 의원님들이 사무실 구하실 때 온비드 시스템 입찰 과정을 직접 하시는지는……

○임이자 의원 전혀 아예, 장관님 이름으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장관님은 그 계약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영화 반대를 했을 때에는 어떤 목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일산과 분당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2개가 남아 있었고요. 이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저렴한 비용으로……

○임이자 의원 어쨌든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성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요.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임이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장관님 사무실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이자 의원 이게 옳은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나 외압도 없었습니다.

○임이자 의원 어쨌든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 없이 지내 왔는데……

○임이자 의원 장관님,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

부장관 안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밝혔듯이……

○임이자 의원 아니, 저는 몰라요. 지금 묻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회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서……

○임이자 의원 지금 2종 근린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지요, 거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것을 저희……

○임이자 의원 그런데 왜 계약서에는 1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지요? 이것 허위계약서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센터의 담당자의 실수……

○임이자 의원 보좌관이 같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보좌관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입찰공고에는 그 규정이 써 있지 않았고요.

○임이자 의원 아니, 그것을 모릅니까? 장관님, 이제는 사회부총리예요.

그리고 민영화 저지도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장관님 자체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그 올림픽센터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분당의 당시 한나라당 의원님과 제가 상임위에서 같이 매각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과 사무실 임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임이자 의원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서는 안 되어야 할 공공기관 시설에 들어갔고, 2종 근린시설인데도 불구하고 1종 근린시설로 허위 계약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부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허위 계약서는요 의원님……

○임이자 의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일단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그것은 허위 계약서가 아니고요.

○임이자 의원 들어가시라고요, 일단.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센터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임이자 의원 들어가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입찰공고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시다.

○임이자 의원 아니, 제가 지금 팩트 체크만 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당시의 특정 감사에서도 저희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임이자 의원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아니, 들어가게서요.

유은혜 장관님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6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신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보면서 왜 유은혜 장관님이 부적격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도덕성을 중시 여기시고 고위공직자들 임명 때 7대 배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거지요. 이 부분을 유은혜 장관이 아주, 개혁의 의지를 무너뜨린 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 앞에 큰일입니다.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임명 7대 원칙을 내세웠을 때 고위공직자들이 엄청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고위임명직에 근무하고자 하고 그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철저히 했을 거고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 해도 되고, 교육 목적이라면 위장전입 무조건 되고 밑에서 했지만 허위 기재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우리 업무추진비 갖고 지금 말이 많은데 이 부분 허위 기재 해도 되고 그다음에 피감기관에 사무실 들어갔는데 나는 몰랐고 그리고 누가 봐도, 요새 상식적으로 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1종하고 구분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2종을 갖다가 1종으로 허위 기재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수장이십니다. 학생, 학부모, 법을 매일매일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



사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교육부장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만 들어서도 전문성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유은혜 장관은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선명하게 국정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계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장관님께서서는 앉아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 총리님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선배시고 저는 당을 떠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이번에 유은혜 장관후보 제청을 하신 것 보고 약간 실망스럽기는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태도로 봤을 때는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로 없어 보이고 이래서 상당히 좀 불쾌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내가 총리님하고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15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대정부질문 나왔을 때는 우리 국민과 아니면 노사 문제를 총리님과 정책적으로 한 가지라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이자 의원 8월 29일 날 소상공인들 집회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이자 의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보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이자 의원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갖다가 부랴부랴 풀었을 때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푼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임이자 의원 그렇지요. 시장이 감내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경영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이자 의원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집행한 것을 보면 38%도 안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비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은 높습니다만 대통령……

○임이자 의원 그렇지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숫자가 중요한 쟁점이라기보다는 우선 사회보험료 부담이 작용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이 경영자들을 많이 압박했을 것이다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애다가 또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유급시간을 합산했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20% 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 그냥 밀어붙이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만 이 시행령은 새롭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정부가 즉 유지해 온 행정해석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좀 닦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희들도 몹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임이자 의원 그렇다고 내년엔 10.9% 올라 있는 임금인상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이자 의원 그래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보완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지난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우리 당 김성태 대표께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규탄 성명도 내고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최저임금법 후퇴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

고요, 제가 방법을 한 네 가지 정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요건을 좀 완화하거나 적용 제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고용보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사회보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건강보험을 90% 수준 감면을 하거나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회보험, 고용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 지원이라면 중기부나 산자부로 이것을 가져가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한시적으로, 시장이 감내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감액 적용시키고 나머지 그 감액 부분만큼만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주는 방법,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구요.

총리께서 이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양쪽의 최저임금 근로자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 양쪽이 윈윈해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님께서 노동 현장의 고통이라든가 또 정부의,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왜곡되는가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신 분이기에 때문에 오늘 주신 네 가지 제안은 성의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또 하나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52시간의 기초는 지키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탄력적 근무라든가 이런 것의 숨통을 틔워 주자라고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디지털시대에서는 사실 그전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기계와 일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만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나인 투 파이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бал 밸류체인도 지금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자라는 그게 우리 대표연설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흔히 노동의 유연성 그러면 해고의 자유와 동의어처럼 받아들이는데 조금 전에 임 의원님 주신 말씀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노동의 형태라든가 또 시간의 적용의 기간이나 틀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왕에 그중에 하나인 탄력근로시간의 기간 이것은 이것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해를 넘기지 않고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마는 그분들의 동의를 얻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어떻게든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동계에 피해의식을 드리지 않게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동의를 얻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고의 자유를 뜻하는 그것이 아니라 노동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의 유연성은 현장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맞게 조금은 더 열린 마음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런 데 동의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이자 의원 지금 현재 산업화시대 사회에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기에는 갈등의 요인이 되지만 다가올 시대에서는 노동유연성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해고의 유연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셔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이자 의원 제가 환노위 소속인데 고용노동부장관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총리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좋은 지혜를 주시고요, 저희들도 국회의 논의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의원 노동의 유연성은 이 정부 아니면 못 합니다. 보수 정부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꼭 해내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이,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지지 세력을 설득하는 것은 그 정부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새기고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임이자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희상 임이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오늘 출석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유은혜 부총리 인사청문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 수장으로서 책임자이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에 본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의 기한을 넘겨가면서 야당에 협조를 했습니다. 법정기한이 9월 18일이지만 우리가 하루를 넘어서 9월 19일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당일에도 밤 11시가 이를 때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적격으로 또 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적격으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적인 내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되고 또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신상 문제, 두 번째로는 총선 출마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성과 관련

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위원으로 우리 국민들과 또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자나 명문 학군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사과했습니다. 또 배우자 재산신고라든가 배우자 회사의 직원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 경미한 오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흠집 내기에 주력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지명되는 첫날부터 반드시 의원 불패의 신화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흠집을 냈던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했다,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아들 병역특혜 의혹 역시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이것도 역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백한 오보이고 어떠한 특권과 혜택도 없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액 후원자 공천 의혹, 근거 없는 의혹입니다. 세비 외에 8500만 원의 종합소득 의혹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의혹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찾아낼 수 있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도 문제가 없었고 우석대 겸임 조교수 겸직금지 위반 여부도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거듭된 질의가 있었지만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과연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 국민 앞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총선 출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 앞에서 국가와 민족 앞에서 복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정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모두의 의무이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거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전문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교육부총리로 책임자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유은혜 장관이 교육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논란이라

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민감한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이 생생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교수 또는 교사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일선학교의 교육행정 경험이 있다고 해서 책임자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분법이 성립하는 것입니까?

교육 문제는 교육의 내적 논리로만 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험난한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쳐서 해당 시점에서 가장 낫다는 안을 선택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소통 능력, 탁월한 정부 판단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은혜 장관은 6년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했습니다. 특정 상임위 활동 6년 정도 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문제의 현안과 쟁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나름의 교육철학을 세우게 되고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의원도 지적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방위상을 이나다 도모미라고 하는 여성 국회의원이 담당했습니다. 방위상은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에 해당됩니다. 군 경험이 없는 여성 의원이 국방장관을 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여성 의원인 실비에 굴라드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가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장관 이상의 직위를 잘 수행하는 데 해당 분야에서 활동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무엇보다 정부적 판단 능력이 있느냐를 우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국회 교육위 활동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은데 본인들 스스로도 교육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문외한들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육위 활동을 통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들은 아예 배제하고 교직 경험이 있는 분들만 교육부총리후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까?

박근혜정부 때도 황우여 전 의원이 1년 반 정도 교육부총리로 있었습니다. 황 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교육계 경력이 없습니다. 황 전 의원의 경우도 교육위 활동을 오래 했다는 것이 교육부총리 발탁의 이유였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유치원부터 평생교육까지 영역이 광범위합니다. 전문가라면 한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6년 경험을 통해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교육부장관의 덕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의미한 국정 발목 잡기보다는 우리 시급한 교육 현안을 풀기 위해서 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 덕분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시급히 풀어야 할 교육 현안이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에서 다시 일어나 원조를 주는 OECD 회원국이 된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학구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하는 나라, 많은 지식을 쌓고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쉬운 나라, 공부와 성적 부담으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는 나라, 우리 교육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이 국가 생존을 좌우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는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현실을 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또 작은 대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번에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목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일본에서는 이른바 부등교, 국내에서는 등교 거부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불렸던 문제입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현행 공교육 체계 내에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아이들 역시 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쩌면 비정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서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있다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35만 쯤 됩니까, 3만 5000 쯤 됩니까?

○**박찬대 의원** 2015년도 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5만 명이 공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유는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조사를 보면 초·중등 학생의 경우는 조기유학이나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고등학생은 아예 검정고시를 통해서 바로 대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대 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공교육의 교육 체계를 벗어나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 하는 대안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현실은 헌법적 선언과는 다르게 지금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로 고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총리님 혹시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공교육이 그런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의원** 지금 제도권 내에서 일부 대안교육이 제한된 형태와 규모로 시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대안적 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총리님 말씀대로 역부족입니다.

교육 당국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 우리 모두가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모든 논의가 대입 논쟁으로 몰려 있고 제도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결국은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이 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소득과 교육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돼서 어떤 연구를 보면 네 살 될 때까지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어땠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의 소득을 결정짓는다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회의원 할 적에 저희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은 꽤 즐거워하고 학부모님들이 간간히 면회를 오시는데, 물론 속으로야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마는 자식들 앞에서 사랑해 주시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대안학교를 좀 더 충실화해 가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찬대 의원** 반세기 전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도 역시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람을 키워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의 체계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창의적인 교육, 다양한 교육적 수요 이 부분에 대해

서 총리님께서 좀 더 많은 따뜻한 관심과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어디서 읽어 봤던 것인데요.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돼 있습니다마는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라면 지금의 빌 게이츠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중퇴해서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을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들이 충실히 준비되는 것, 이것이 다양해지는 또는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미래의 세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하겠단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찬대 의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알차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집행돼야 됩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교육부장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박찬대 의원 교육부의 수장으로 장관의 교육철학·신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그리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선생님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적됐던 것처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을 넘어서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평생 생애주기별로 교육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까지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그러면 부총리께서 가장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큰 틀에서는 제가 어제 취임사에서 밝혔던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논의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적인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갈 그런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두 부분은 곧 계획을 세워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육정책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던 고교 무상교육은 시기를 좀 앞당겨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유아교육의 출발선상에서부터 국가가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출발선상에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종일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빨리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금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의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당겨서 추진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원래 2020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는데요. 저는 2019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고교 무상교육은 OECD 전체 국가가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기로 보면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중위소득 50% 이상의,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3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국민들, 그러니까 대다수 서민들과 중산층,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연 156만 원, 월 한 13만 원 정도의 가처분소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매우 필요하고,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앞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충분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찬대 의원 관련 법안과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관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박근혜정부 당시에 국정과제로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문제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법적 논의를 충분히,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면, 재정당국과 이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정책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국가적 책임 강화 그리고 교육비 절감을 통한 국민의 생활을 높이는 이런 측면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존의 공교육 체계 내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총리님께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매년 5만 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을 벗어나고 있고 그중의 상당수는 또 대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그중에는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 밖에서 떠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겠지요. 포용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청소년들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이고요. 관련 예산도 많이 증액돼야 되고 또 교육의 다양성 때문에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정한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찬대 의원 지금 사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설문이나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봤는데요. 인가요건이 까다로워서 인가를 못 받는 데도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초의 건학 이념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가받기를 주저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는데요.

2014년도에 교육부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 법제화를 추진한 적이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찬대 의원 그때는 아마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대 국회에서도 대안교육 법과 관련된 발의가 2건이 있는데요. 지금은 교육부가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꼭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법제화를 추진했었지만 잘 안 돼 있었던 것이 대안교육 관련 단체들이 등록제를 실시하게 되면 자율성이 침해받는다 그리고 미등록 기관을 폐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견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법제화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는 미인가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라든가 이런 조항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면 대안학교가 아닌 다른 시설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그런 현실적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안학교나 혹은 대안교육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이 법으로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실제적인 대안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학원과 같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규제나 폐쇄 조치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당시에는 교육적 대안을 원하는 학생의 입장보다는 교육부의 교육과정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안교육계에서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대안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도 무조건 난색을 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미 지자체에서 일부 그런 조례들을 제정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밖 아이들을 포함해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제화나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지금 제도권 편입을 거부해 왔던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다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많이 소박합니다. 학교를 학교로 부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지원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등록을 통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 신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대안학교로부터 혁신학교와 오디세이학교의 모델이 만들어져 왔는데 그 공로를 인정하기보다는 학원보다 못한 대우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무 당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해서 교육의 다양성을 높여 주기 위한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대안학교·대안교육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의 다양성을 실제로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또 교육청에서 이런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과 법제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에서 12년간 착실하게 준비해 온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한편으로 대학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진학에 몰두하는 수십년간 고착된 교육구조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그간 교육계의 화두였던 창의인재 육성은 일성에만 그쳤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두 똑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는, 붕어빵을 찍어 내는 교육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 일변도의 공부지옥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성장전력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 성장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키워 내는 것은 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방식과 진로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이 있을 때 혁신 성장의 기회는 올 것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 혁신,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교육만큼은 정부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 의원(253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고용진 광대훈 광상도 권미혁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이혜훈 이후삼 이현훈 인재근  
기동민 김경진 김철승 김관영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병관 김민기 김상훈 김병욱 김병관  
김두관 김명연 김삼화 김상훈 김성수 김성태 김승희 김용태  
김병욱 김부겸 김선동 김삼환 김성찬 김승희 김용태 김정재  
김상희 김석기 김성원 김순례 김영호 김종민 김진태 김학용  
김성식 김수민 김영진 김종대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김현래  
金成泰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도종환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민경욱 박대출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박범계 박순자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박용진 박주선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박홍근 변재일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송기현 송희경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신용현 심재권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안호영 염동열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우상호 유동수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유의동 윤상현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윤일규 윤한홍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이만희 이상현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이응득 이은재  
김영주 김재경 김종회 김진표 김한정 김현아 이정현 이주영

이철규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현훈 인재근  
임이자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희경 장우택  
전현회 전병국 전성호 정춘숙  
정동영 정용기 정진석 조경태  
정양석 정진석 조경태 지상욱  
정종섭 정진석 조경태 천정배  
제윤경 조경태 천정배 최연혜  
조응천 조경태 최연혜 추경호  
주호영 지상욱 최연혜 표창원  
채이배 천정배 최연혜 표창원  
최도자 최연혜 표창원 함진규  
최재성 추경호 표창원 함일표  
한선교 한영표 홍일표  
황영철

## ○개의 시 재석 의원(130인)

강길부 강석진 강효상 강훈식  
광대훈 권미혁 권성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수민 김영진  
김재경 김정우 김종대 김종석  
김종회 김중로 김진태 김철민  
김한표 노용래 도종환 맹성규  
민홍철 박경미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병석 박선숙 박영선  
박완수 박용진 박주민 박주선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서삼석 서형수 송일중  
손혜원 송갑석 송기현 송석준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염용수 우상호 위성곤 유동수  
유은혜 유상직 윤영일 윤준호  
윤영일 윤일규 윤한홍 이규희  
윤준호 윤상민 이상현 이양수  
이만희 이종구 이종배 이찬열  
이철휘 이후삼 이태규 임이자  
임재훈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전 현 희    전 혜 숙    정 갑 윤    정 양 석  
정 우 택    정 유 섭    정 춘 숙    정 태 옥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지 상 옥    진 선 미    천 정 배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윤 열    최 인 호  
추 경 호    표 창 원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철 호    황 영 철

○속개 시 재석 의원(65인)

곽 상 도    권 미 혁    기 동 민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부 겸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태    김 승 희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정 우    김 종 회    김 중 로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권    남 인 순  
도 중 환    문 회 상    민 홍 철    박 광 온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완 수    박 인 숙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재 현    백 혜 련  
서 삼 석    손 혜 원    신 경 민    신 동 근  
어 기 구    염 동 열    오 제 세    유 동 수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재 중    윤 재 옥  
이 상 현    이 태 규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혜 훈    이 후 삼    임 이 자    장 정 숙  
전 회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성 호  
정 유 섭    정 춘 숙    진 선 미    최 교 일  
최 도 자

○산회 시 재석 의원(59인)

권 미 혁    기 동 민    김 도 읍    김 민 기  
김 병 관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성 원    김 성 태    김 영 진    김 영 호  
김 재 원    김 정 우    김 종 민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현 권    남 인 순    도 중 환  
문 진 국    문 회 상    박 경 미    박 병 석  
박 주 현    박 홍 근    백 재 현    설    훈  
손 혜 원    송 기 현    신 동 근    심 재 권  
안 상 수    어 기 구    오 영 훈    유 동 수  
유 은 혜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이 규 희    이 만 희    이 원 옥    이 인 영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현 승    이 혜 훈  
이 후 삼    전 재 수    전 혜 숙    정 유 섭  
정 춘 숙    조 승 래    진 선 미    최 교 일  
최 도 자    추 경 호    홍 영 표

○청가 의원(36인)

김 광 수    김 병 기    김 성 환    김 영 춘  
김 정 호    김 태 년    민 병 두    박    정  
서 영 교    소 병 훈    손 금 주    송 영 길

신 보 라    안 민 석    우 원 식    원 혜 영  
유 민 봉    유 성 엽    윤 호 중    이 개 호  
이 동 섭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용 주  
이 재 정    이 종 결    정 윤 천    정 인 화  
정 재 호    조 원 진    주 승 용    추 미 애  
추 혜 선    홍 의 락    홍 익 표    황    희

○국회 참석자

입    법    차    장                    한    공    식  
사    무    차    장                    김    수    홍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이    낙    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    은    혜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중    환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    능    후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재    갑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진    선    미

○출석 정부위원

행    정    안    전    부    차    관                    심    보    균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이    효    성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 위원회    | 위원명 | 교섭단체  | 연월일          |
|--------|-----|-------|--------------|
| 교    육 | 임재훈 | 바른미래당 | 2018. 10. 2. |

○의안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이찬열·황주홍·백재현·이동섭·  
위성곤·김광수·권칠승·조경태·유성엽·  
유동수·윤후덕·김삼화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  
발의)

(2018. 10. 2. 정갑윤·김석기·김명연·추경호·  
이종명·송희경·권성동·문진국·조경태·  
김규환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이찬열·김광수·강병원·  
이언주·전혜숙·권칠승·노웅래·박덕흠·  
홍문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 · 이찬열 · 정춘숙 · 노웅래 · 이언주 · 전해숙 · 권칠승 · 박덕흠 · 홍문표 · 이명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 · 이찬열 · 김두관 · 윤일규 · 심기준 · 전해숙 · 기동민 · 권칠승 · 이명수 · 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 · 이상돈 · 이찬열 · 정태욱 · 정춘숙 · 강병원 · 이언주 · 강길부 · 전해숙 · 권칠승 · 노웅래 · 백재현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 · 이찬열 · 김두관 · 윤일규 · 심기준 · 전해숙 · 기동민 · 권칠승 · 이명수 · 홍문표 의원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이석현 · 김병기 · 조승래 · 윤일규 · 임종성 · 안호영 · 김해영 · 심재권 · 이재정 · 조배숙 · 박광온 · 김경협 · 안규백 · 안민석 의원 발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이석현 · 김영진 · 유동수 · 전재수 · 위성곤 · 김병기 · 박찬대 · 이학영 · 김영호 · 정세균 · 박정 · 김해영 · 박주민 · 이원욱 · 조승래 · 윤후덕 · 이인영 · 박홍근 · 이진복 · 표창원 · 송기현 · 안호영 · 이상현 · 윤일규 · 임종성 · 이규희 · 심재권 · 유성엽 · 하태경 · 조배숙 · 박광온 · 김경협 · 홍영표 · 안민석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이석현 · 김해영 · 이원욱 · 조승래 · 윤후덕 · 이인영 · 박홍근 · 이진복 · 표창원 · 김영진 · 유동수 · 전재수 · 김병기 · 박찬대 · 위성곤 · 이학영 · 김영호 · 정세균 · 박정 · 송기현 · 안호영 · 윤일규 · 이규희 · 심재권 · 유성엽 · 하태경 · 조배숙 · 박광온 · 홍영표 · 안민석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오제세 · 이찬열 · 김두관 · 윤일규 ·

심기준 · 전해숙 · 기동민 · 권칠승 · 최도자 · 홍문표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김종회 · 장병완 · 조배숙 · 최도자 · 임종성 · 유성엽 · 윤영일 · 천정배 · 이찬열 · 황주홍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박용진 · 윤호중 · 박찬대 · 김해영 · 이철희 · 강병원 · 심상정 · 이종걸 · 금태섭 · 이춘석 · 김영주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이석현 · 김해영 · 박주민 · 이원욱 · 조승래 · 윤후덕 · 이인영 · 박홍근 · 이진복 · 표창원 · 김영진 · 유동수 · 전재수 · 김병기 · 박찬대 · 위성곤 · 이학영 · 김영호 · 정세균 · 박정 · 송기현 · 안호영 · 이상현 · 윤일규 · 임종성 · 이규희 · 심재권 · 유성엽 · 하태경 · 김경협 · 박광온 · 조배숙 · 홍영표 · 안민석 의원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임종성 · 김종회 · 김상희 · 박재호 · 백재현 · 조승래 · 강병원 · 김병욱 · 이용호 · 박홍근 · 윤후덕 · 권미혁 · 이규희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0. 2. 노웅래 · 김민기 · 서영교 · 김정우 · 최재성 · 장병완 · 고용진 · 임종성 · 김철민 · 송옥주 의원 발의)

이상 1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청원 제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18. 10. 2.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외 7인 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계획서 제출

**2018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

(2018. 10. 2. 정부 제출)

○보고서 제출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18. 10. 2. 경찰청 제출)(비공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